



현안보고서 2023-01

지표로 보는 KIHASA 사회보장 동향 - 소득과 주거

김성아
신영규·임덕영·노현주



BIG
DATA



■ 집필진

대표집필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집필자	신영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노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현안보고서 2023-01

지표로 보는 KIHASA 사회보장 동향

- 소득과 주거

발행일 2023년 06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I. 지표로 보는 동향 분석의 의의와 구성	1
1. 지표로 보는 동향 분석의 의의	3
2. 소득보장과 주거 분야 지표 구성	3
II. 지표로 보는 소득과 주거 동향	9
1. 가계	11
2. 소득분배	16
3. 경제활동	28
4. 소득보장정책 수요 및 공급	33
5. 주거	40
III. 평가 및 시사점	45
참고문헌	51

지표 목록

1. 가계

1.1. 가구 소득	11
1.2. 가계 지출	13
1.3. 가계 자산 및 부채	15

2. 소득분배

2.1. 빈곤 및 불평등 국제비교	16
2.2. 빈곤 및 불평등	18
2.3. 주요 연령집단별 빈곤	19
2.4. 노인 연령집단별 빈곤율	21
2.5. 주요 인구 집단 및 가구 유형별 빈곤	23

3. 경제활동

3.1. 근로빈곤율	28
3.2. 저임금근로자 비율	29
3.3. 장기실업률	30
3.4. 취업준비자 비율	31
3.5. 쉬고 있는 인구 비율	32

4. 소득보장정책 수요 및 공급

4.1. 기준 중위소득	33
4.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34
4.3. 기초연금 수급률	35
4.4. 긴급복지지원 지원 건 수	36
4.5. 공적연금 수급률	37
4.6.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39

5. 주거

5.1.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40
5.2. 주택임대료 부담률	42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 .

지표로 보는 동향 분석의 의의와 구성

1. 지표로 보는 동향 분석의 의의
2. 소득보장과 주거 분야 지표 구성

1. 지표로 보는 동향 분석의 의의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¹⁾ 짐1). 그리고 인간다운 삶은 기본적인 경제적 웰빙(economic well-being)의 기반에서 실현할 수 있음.
- 「지표로 보는 KIHASA 사회보장 동향」은 소득과 경제활동, 주거 등의 물질적 삶 기반으로 부터 출발함.
 -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주거와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가구의 경제력, 소득을 벌어들이고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위한 경제활동, 그리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소득이나 지출, 자산, 부채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주거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빈곤층의 실태의 최근 10년간 추이와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의 위치를 파악하고 격차를 파악하고자 함.

2. 소득보장과 주거 분야 지표 구성

- 가계는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고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단위임.
- 가구는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면서 소비 대비 소득의 초과분을 자산으로 축적하고, 필요한 경우 부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함.
-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비동거 가구원이나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 및 기여금 및 재정지원으로 인한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됨.
 - 생계를 위한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지출함. 또한 비동거 가구원이나 비영리단체 등으로의 사적이전지출 및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지기 위한 사회보장기여금 및 세금 등의 공적이전지출, 그리고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 등을 지출함.
- 가계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의 수준과 구성을 확인하는 것은 소득분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표 1-1〉 가계 지표 구성

측정지표
①가계 소득 및 구성요소별 수준
②가계 총지출 및 구성요소별 수준
③가계 총자산 및 부채

1) 「헌법」 10조(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4 지표로 보는 KIHASA 사회보장 동향: 소득과 주거

- 소득보장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1차 분배 이후 격차와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세대 간 및 세대 간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위험을 분산, 대응하는 공적 기제임.
- 빈곤율을 통해 경제적 취약 집단의 존재와 규모를 파악하고, 지니계수로 대표되는 지표를 통해 격차의 실태를 파악함.
 - 연령집단이나 주요 가구유형별 빈곤율을 파악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집단의 존재와 규모를 파악하고자 함.
- 특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지출로 구성되는 시장소득 기준 소득분배지표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 및 공적이전지출을 고려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배지표를 비교함으로써 소득보장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표 1-2〉 소득분배 지표 구성

측정지표
①(상대)빈곤율 및 지니계수
②연령집단별 빈곤율(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등),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
③주요 가구유형별 빈곤율(장애인, 여성, 한부모 등),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

-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여 빈곤을 벗어나도록 하는 다양한 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ies)이 운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근로빈곤이 발생하고 있음.
- 일하지만 빈곤을 겪는 사람이 많다면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 유인이 줄어들 수 있고, 빈곤 탈출을 위한 방법으로 고용의 효용도 감소할 수 있음.
- 이처럼 근로빈곤 발생 정도는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로빈곤율에 대한 관찰과 그 변동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근로빈곤율은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처분 가능한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노동시장에서 임금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다면 임금 불평등이 높을 가능성이 크고 근로빈곤 발생 확률도 높음을 의미함.
- 임금 불평등 정도와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저임금근로자 비율 추이에 대한 정기적인 추적이 필요함.
-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월 임금 중위값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을 뜻함.

- 장기실업자는 오랫동안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소득이 없고,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모두 소진하여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실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 재진입이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발견됨.
 - 장기실업자는 다른 실업자들보다 소득과 고용의 취약성이 더 높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 규모에 대한 관찰과 추적이 요청됨.
 - 장기실업률은 전체 실업자 중 1년 이상 실업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뜻함.
- 우리나라의 장기실업률은 장기간에 걸쳐 개인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취업준비자 규모를 별도로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장기간에 걸쳐 개인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업자로 인정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됨으로써 장기실업자로 파악되지 않음.
 - 향후 취업준비자의 특성을 이해하여 그들을 위한 사회정책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우선 그 규모에 대한 파악과 추적이 필요함.
 - 취업준비자 비율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수 대비 취업준비자 규모를 뜻함.
-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큰 집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규모를 파악하여 사회보장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 마련이 필요함.
 -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고 있는’ 사람들의 규모를 발표하는데 이를 통해 구직활동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인구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특히 우리 정부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 규모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직활동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쉬고 있는’ 청년의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쉬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수 대비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규모를 의미함.

〈표 1-3〉 경제활동 지표 구성

측정지표	
①	근로빈곤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②	장기실업률, 취업준비자 비율, 쉬고 있는 사람 비율

- 소득보장 정책 수요 및 공급 관련 주요 지표로 기준 중위소득, 주요 소득보장제도 수급자 수와 수급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로 구성함.
 - 기준 중위소득과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수급률은 시계열 분석하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국제비교를 통한 시계열 자료를 살펴보고자 함.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증위값임.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의 수급자와 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선으로써(보건복지부, 2022.7.29.),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주요 복지사업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임.

- 국내의 주요 소득보장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제도별 기준에 따른 수혜대상자로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 수(또는 지원 건수)와 인구 수 대비 수급자의 비율을 주요 지표로써 구성하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임. 또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의 긴급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소득보장 정책의 수요와 공급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판단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2000년부터 도입된 공공부조 제도임(e-나라지표, 2022).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은 주요 노후소득원으로써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요와 공급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임. 다만 노후소득보장제도인 준공적 연금(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사적연금(개인연금)은 활성화되지 않아 노후소득보장으로써의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제외하고자 함.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임(보건복지부, 2022a).
 -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방식의 사회보장제도이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정 직업군 대상의 특수직역 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이 있음.

□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일한 근무 기간의 평균 임금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말함.

〈표 1-4〉 소득보장정책 수요 및 공급 지표 구성

측정지표
① 기준중위소득
② 주요 소득보장제도 수급률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③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 주거 관련 주요 지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로 구성함.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물리적으로 열악한 거처의 비율을 나타내며,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은 주거비와 관련된 부담 수준을 나타냄.
 - 두 지표 모두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시계열로 살펴봄.

□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임(법 제17조).

- 구체적인 최저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 공고인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1-490호, 2011.5.27., 일부개정)에서 정함.
 - 최저주거기준은 ① 가구구성별 최저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 개수 기준, ②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③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으로 구성되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높을수록 최저한도의 주거권 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 비율이 높다는 의미임.

□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은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드러내는 대리지표의 수준임.

- 주택임대료 비율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임.

〈표 1-5〉 주거 지표 구성

측정지표
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②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



II .

지표로 보는 소득과 주거 동향

1. 가계
2. 소득분배
3. 경제활동
4. 소득보장정책 수요 및 공급
5.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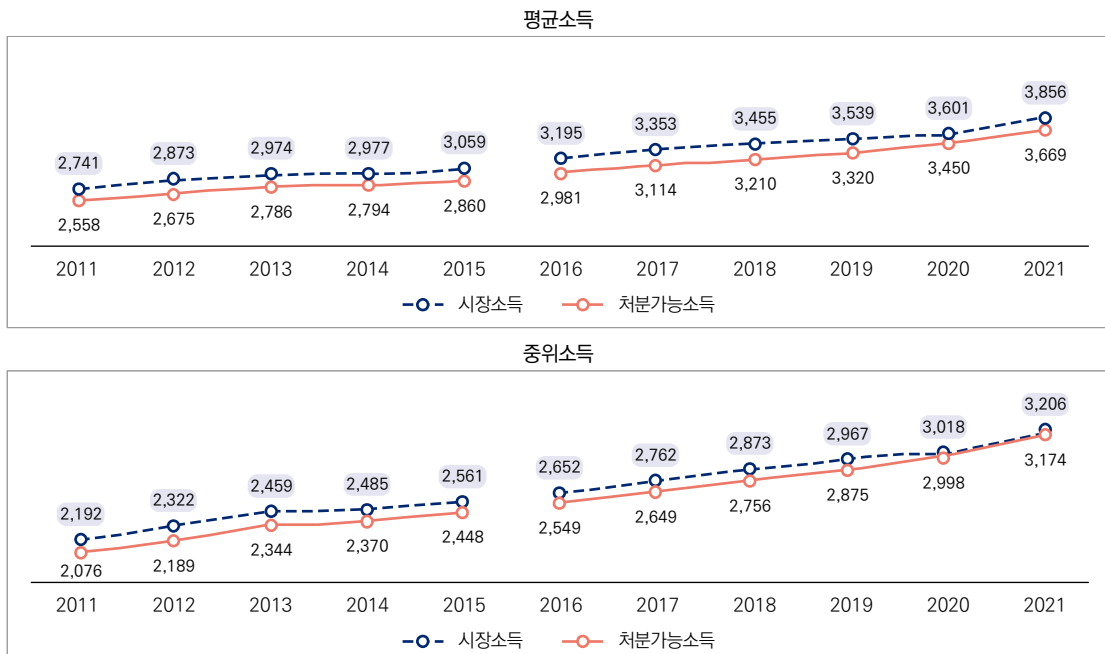
1. 가계

1.1. 가구 소득

- 우리나라 가구의 균등화 평균 시장소득은 2011년 연간 2,741만 원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2,856만 원 수준임.
 -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지출과 공적이전소득을 고려한 처분가능소득은 같은 기간 2,558만 원에서 3,669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가구의 중위 시장소득은 평균 시장소득에 비해 다소 낮은데, 2011년 2,192만 원에서 2021년 3,206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같은 기간 중위 처분가능소득은 2,076만 원에서 3,174만 원으로 점차 증가했음.
- 중위소득이 평균소득보다 작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최저 소득자를 왼쪽 끝에 두고 최고 소득자를 오른쪽 끝에 두는 분포가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즉 중산층 이하 집단의 규모가 두터운 실태를 의미함.

[그림 2-1] 2011~2021년 가구 소득

(단위: 만 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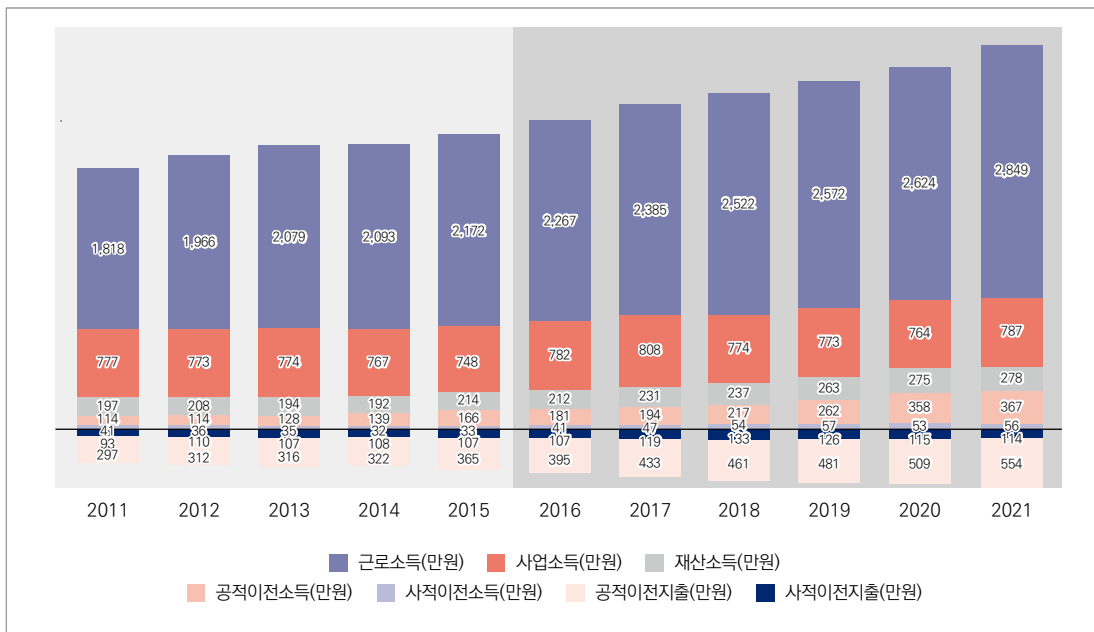
주: 소득 시점 기준임. 가구원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소득임. 2011~2015년은 조사자료에 의한 것이고, 2016~2021년은 행정자료를 보완한 자료에 의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12 지표로 보는 KIHASA 사회보장 동향: 소득과 주거

- 2011년부터 지난 10여 년 동안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2011년 1,818만 원에서 2021년 2,849만 원으로 연평균 5.7%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은 같은 기간 777만 원에서 787만 원으로 변화량이 거의 없음.
- 평균 재산소득은 2011년 197만 원에서 2021년 278만 원으로 연평균 4.1% 증가, 사적이전소득은 41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하였음.
-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같은 기간 114만 원에서 367만 원으로 연평균 22.2% 대폭 증가하여, 기여금 및 재정지출에 의한 소득보장정책이 확대 추세를 보여줌.
- 평균 공적이전지출은 2011년 297만 원에서 2021년 554만 원으로 연평균 8.7% 증가, 사적이전지출은 같은 기간 93만 원에서 114만 원으로 연평균 2.3% 증가하였음.

[그림 2-2] 2011~2021년 가구 소득 구성요소별 수준

(단위: 만원)



주: 지출 시점 기준임. 가구원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소득임. 2011~2015년은 조사자료에 의한 것이고, 2016~2021년은 행정자료를 보완한 자료에 의한 것임.
 자료: 통계청. (2022.12.1.a).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13에서 2023.3.31. 인출.

1.2. 가계 지출

□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 가구의 2011년 소비지출은 2,302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2,856만 원으로 연평균 2.4% 정도 증가하였음.

○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공적이전지출, 비동거 가구원을 위한 지출이나 기부 등 사적이전지출, 그리고 이자비용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은 2011년 757만 원에서 2021년 1,185만 원으로 연평균 5.7% 정도 증가하였음.

□ 가계의 지출을 구성하는 요소별 추세를 보면, 외식을 포함하는 식료품비는 2011년 638만 원에서 2021년 908만 원으로 연간 약 4.2% 증가하였음.

○ 주거비는 같은 기간 292만 원에서 344만 원으로 연평균 약 1.8% 정도 증가한 반면, 교육비는 349만 원에서 288만 원으로 연평균 약 1.7% 정도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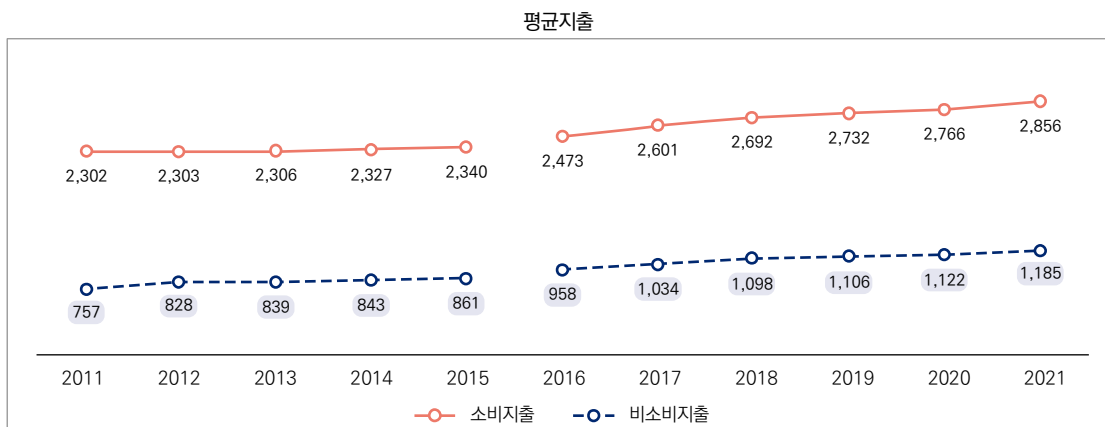
○ 의료비는 2011년 132만 원에서 2021년 202만 원으로 연평균 약 5.2% 정도 증가하였고, 교통비와 통신비는 같은 기간 267만 원에서 262만 원, 161만 원에서 169만 원으로 큰 변화량을 보이지 않음.

○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공적이전지출은 2011년 425만 원에서 2021년 800만 원으로 연평균 약 8.8% 정도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사적이전지출은 152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이자비용은 181만 원에서 209만 원으로 약간 증가하였음.

- 공적이전지출이 연평균 약 8.8% 정도 증가했지만 [그림 2-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공적이전소득이 연평균 22.2% 증가한 점을 복기하면, 가구의 공적이전지출 부담을 초과하는 수준의 공적이전소득으로 가계에 환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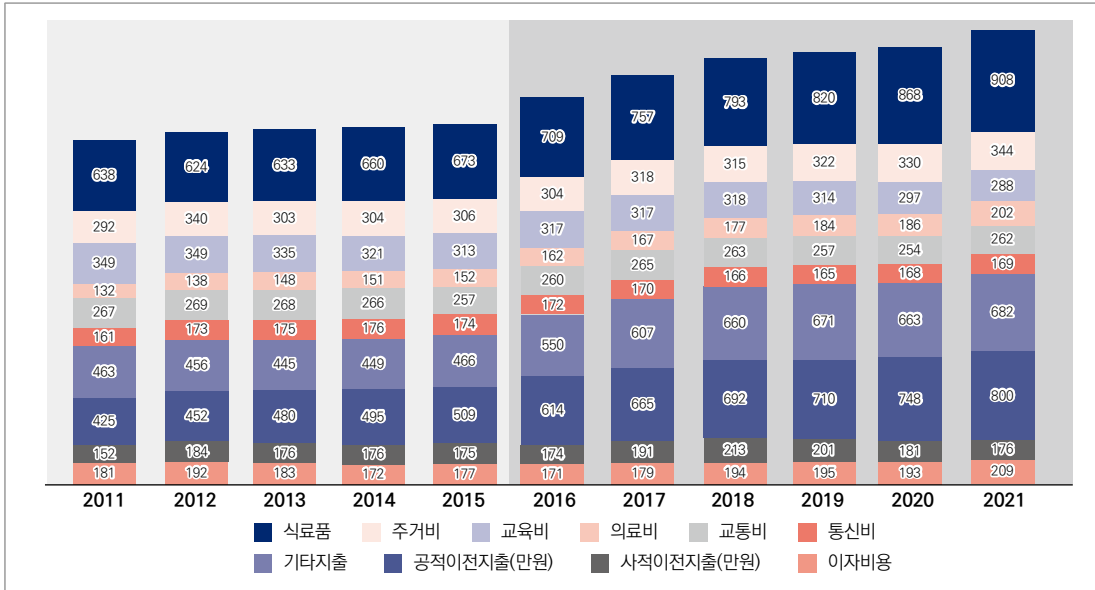
[그림 2-3] 2011~2021년 가구 지출

(단위: 만 원/년)



14 지표로 보는 KIHASA 사회보장 동향: 소득과 주거

평균 지출 구성요소별 수준



주: 소득 및 지출 시점 기준임. 2011~2015년은 조사자료에 의한 것이고, 2016~2021년은 행정자료를 보완한 자료에 의한 것임.
 자료: 1) 2011~2015년 소비지출: 통계청. (2020.12.17.a). 가구특성별 비목별 소비지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DB06&conn_path=I3 에서 2023.3.31. 인출.
 2) 2016~2021년 소비지출: 통계청. (2022.12.1.b). 가구특성별 비목별 소비지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B07&conn_path=I3 에서 2023.3.31. 인출.
 3) 2011~2015년 비소비지출: 통계청. (2020.12.17.b). 가구특성별 비목별 비소비지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DB08&conn_path=I3 에서 2023.3.31. 인출.
 4) 2016~2021년 비소비지출: 통계청. (2022.12.1.c). 가구특성별 비목별 비소비지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B06&conn_path=I3 에서 2023.3.31. 인출.

1.3. 가계 자산 및 부채

□ 2011년 우리나라 전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2,324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5억 4,772만 원으로 연평균 약 6.9% 증가했음.

- 자산 보유가구 비율이 2011년부터 최근까지 100%로 나타나 거의 모든 가구가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보유한 자산의 증양값은 2011년 1억 7,170만 원에서 2021년 3억 690만 원으로 연간 약 7.9%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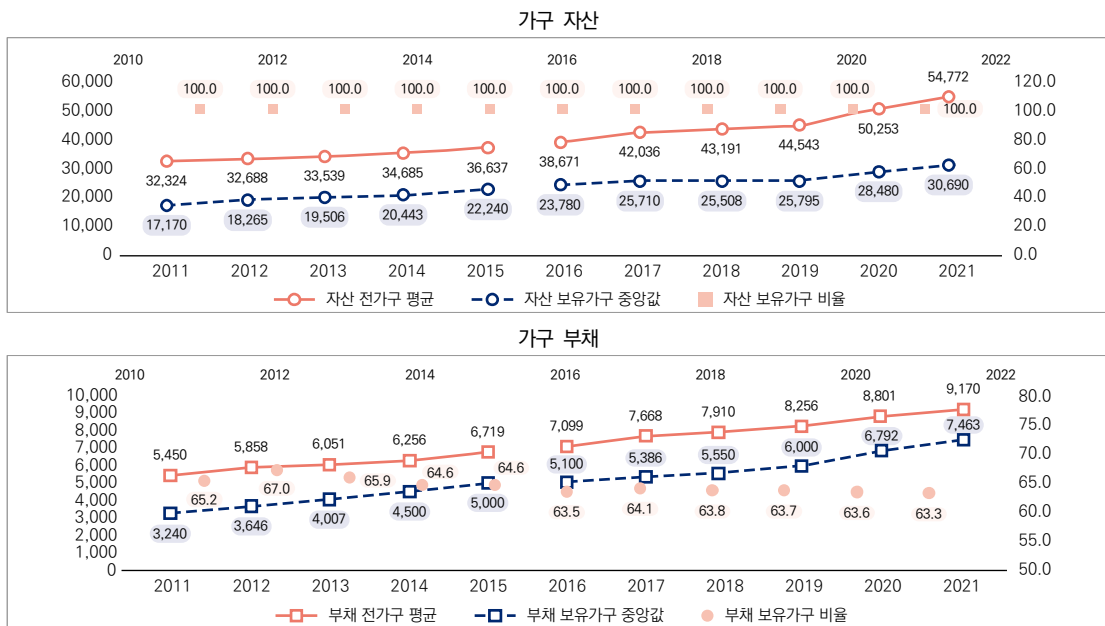
○ 자산 또한 평균값이 증양값보다 큰, 다시 말해 최저자산가구의 자산액을 왼쪽 끝에 두고 최고자산가구의 자산액을 오른쪽 끝에 둔 자산의 분포가 왼쪽으로 치우친 형태로, 고자산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혹은 중간 수준의 자산 가구의 규모가 보다 두터운 형태임.

□ 우리나라 전 가구가 보유한 부채액은 2011년 5,450만 원에서 2021년 9,170만 원으로 연평균 6.8% 정도 증가하였음.

○ 이는 부채를 보유하는 가구의 규모는 2011년 65.2%에서 2021년 63.3%로 다소 증가했다가 다소 감소하여 2021년에는 63.3% 정도이고, 가구 부채의 증양값은 2011년 3,240만 원에서 2021년 7,463만 원으로 연평균 약 13.0% 증가하였음.

[그림 2-4] 가구 자산 및 부채(2011~2021년)

(단위: 만 원)



주: 소득 및 지출 시점 기준임. 2011~2015년은 조사자료에 의한 것이고, 2016~2021년은 행정자료를 보완한 자료에 의한 것임.
 자료: 1) 2011~2015년: 통계청. (2020.12.17.c). 가구특성별 자산부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BD01&conn_path=I3 에서 2023.3.31. 인출.
 2) 2016~2021년: 통계청. (2022.12.1.d). 가구특성별 자산부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D01&conn_path=I3 에서 2023.3.31. 인출.

2. 소득분배

2.1. 빈곤 및 불평등 국제비교

빈곤율 =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수 / 전체 인구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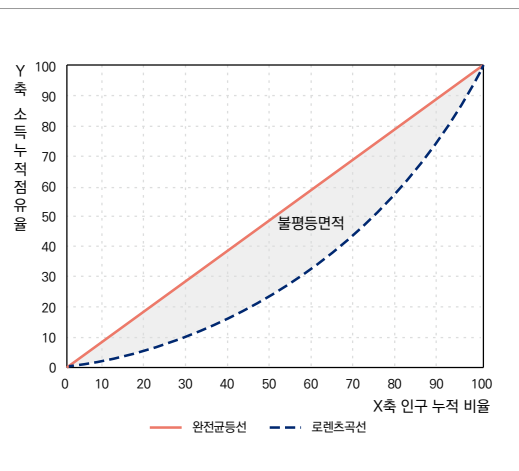
- 가구 소득: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시장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 빈곤선: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의 50%

빈곤 완화 효과 = (시장소득 빈곤율 - 처분가능소득 빈곤율) / 시장소득 빈곤율 × 100

지니계수 = 불평등면적 / △ABC

불평등 완화 효과 = {(시장소득 불평등 - 처분가능소득 불평등) / 시장소득 불평등} × 100

자료: e-나라지표 (2022.12.19). 지니계수.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7 에서 2022.12.20. 인출.



□ 최근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15.3%로 37개 국가 중 7 번째로 높음.

○ 코스타리카의 빈곤율이 20.3%로 가장 높고, 이스라엘의 빈곤율이 17.3% 정도임.

○ 그 다음 빈곤율이 높은 라트비아(16.9%), 멕시코(16.6%) 등과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6%대로 사실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31로 10번째로 높은 수준임.

○ 빈곤율이 가장 높은 코스타리카는 지니계수 또한 0.487로 비교대상 국가 중 불평등 정도가 가장 높음.

○ 그 외 멕시코, 튀르키예, 미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영국 순으로 불평등 정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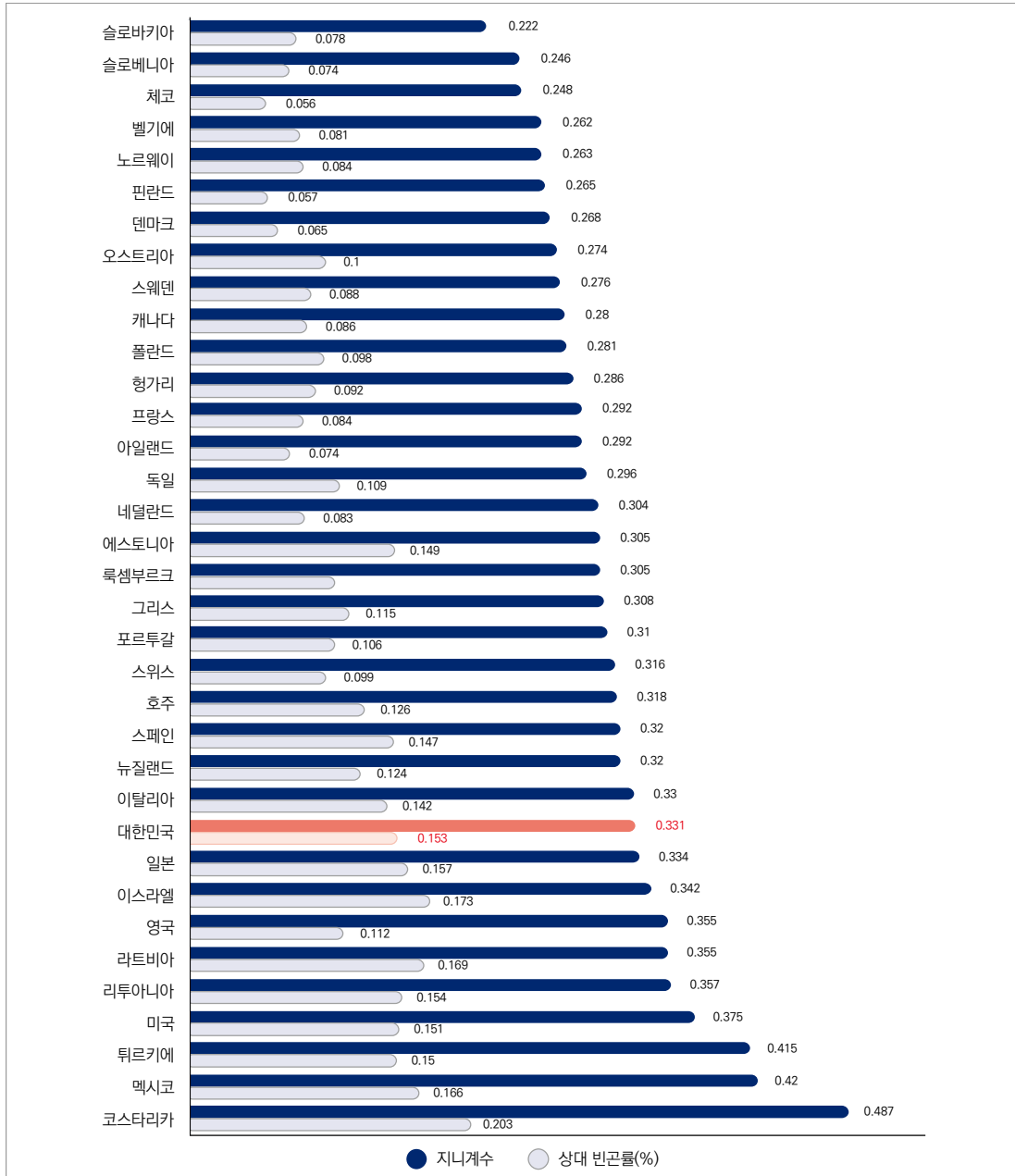
□ 종합하면, OECD 가입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빈곤과 불평등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와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임.

○ 시리아 내전과 인플레이션 등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에 이어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의 빈곤과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5] OECD 가입국의 빈곤과 불평등

(단위: ×100=%)



주: 2018~2022년 중 가장 최근 유효값임. 빈곤은 균등화된 중위 처분가능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하는 상대빈곤율임. 조세부담 및 공적이전을 고려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지니계수로 측정하는 불평등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함.
 자료: 1) (빈곤율) OECD. (2023a). Poverty rate (indicator). Retrieved from doi: 10.1787/0fe1315d-en 2023.3.31.
 2) (지니계수) OECD. (2023b). Income inequality (indicator). Retrieved from doi: 10.1787/459aa7f1-en 2023.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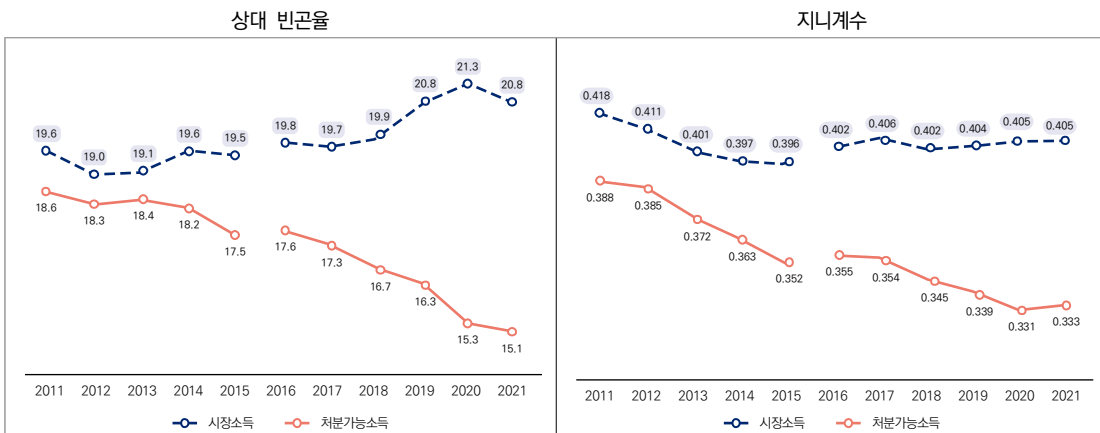
2.2. 빈곤 및 불평등

-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빈곤율은 2011년 19.6%에서 2020년 21.3%까지 증가했다가 2021년 20.8%로 다소 완화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다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1차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특히 저소득층이 취약했음을 의미함.
- 반면, 공적이전과 조세부담을 고려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18.6%에서 2021년 15.1%로 완화된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에 있어 소득보장정책이 작동했음을 알 수 있음.

-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2011년 0.418에서 2021년 0.405로 다소 개선되었음.
- 소득보장정책에 의한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정책의 효과를 고려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0년 0.333으로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감소 폭보다 다소 크게 감소했음.
- 특히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차이가 공적이전 및 조세의 사회보장정책에 의한 불평등 완화 효과라는 점에서 두 종류의 지니계수 간 차이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사회보장정책이 작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6] 2011~2021년 국내 상대빈곤율 및 지니계수

(단위: %)



주: 상대 빈곤율을 산출하기 위해 가구의 균등화된 소득이 균등화된 중위 처분가능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을 빈곤 인구로 정의함. 2011~2015년은 조사자료에 의한 것이고, 2016~2021년은 행정자료를 보완한 자료에 의한 것임.
 자료: 통계청. (2022.12.1.a).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2에서 2023.3.31. 인출.

2.3. 주요 연령집단별 빈곤

$$\text{연령집단별 빈곤율} = \frac{\text{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의 해당 연령대 가구원 수}}{\text{전체 해당 연령대 인구수}} \times 100$$

- 우리나라 0~18세 아동·청소년의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2011년 10.8%에서 2016년 14.6% 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소 완화되어, 2021년 12.5% 수준임.
 - 처분가능소득 기준 아동·청소년의 빈곤율은 같은 기간 12.0%에서 2016년에 15.3%까지 증가하였지만, 점차 완화되어 2021년 9.8% 수준임.
 - 2018년까지는 공적이전소득 및 공적이전지출이 고려된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2019년부터는 역전되어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에 비해 낮은 추세를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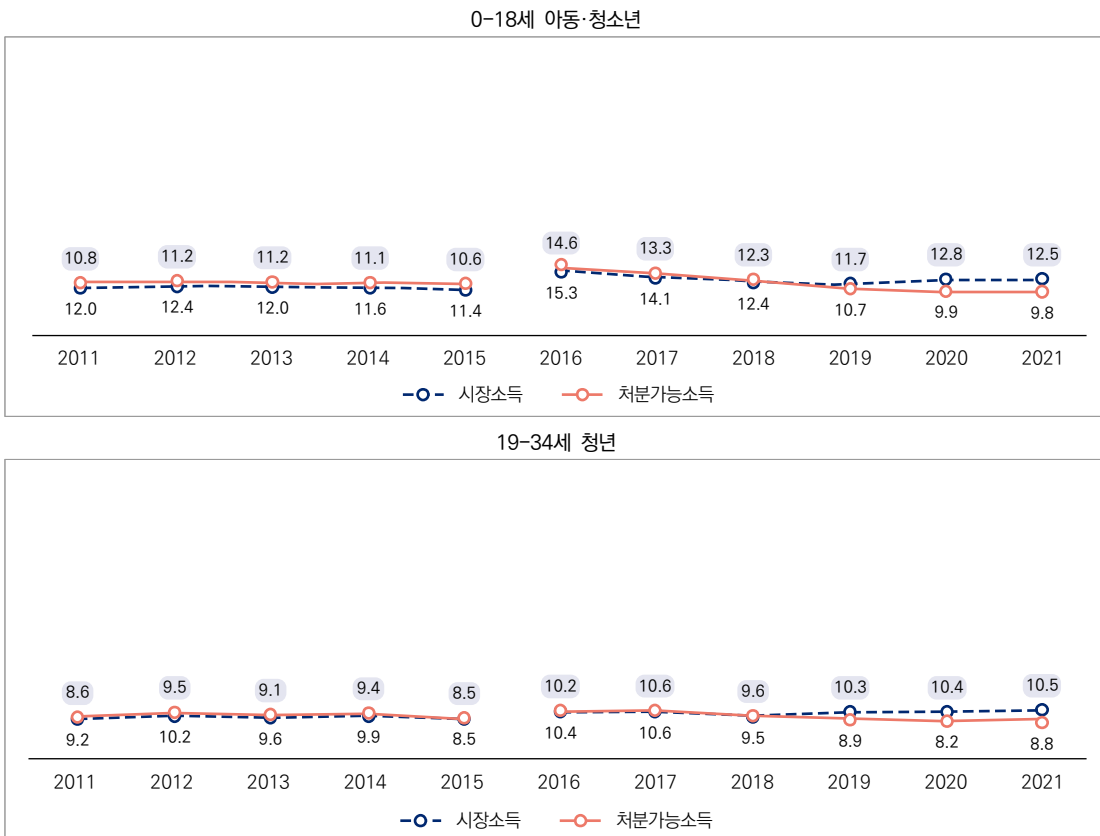
- 19~34세 청년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8.6%에서 2020년 10.5%로 전반적으로 다소 증가하였음.
 -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9.2%에서 2017년 10.6%로 증가했다가, 2020년에는 8.2%로 완화됨. 2021년에는 8.8%로 다소 빈곤율이 높아짐.
 - 아동·청소년 빈곤율과 유사하게 2017년까지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에 비해 높았음.
 - 2018년부터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이 낮아져 공적이전소득 및 지출의 소득보장정책에 의한 빈곤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35~64세 중장년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13.2%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2020년 14.8%로 다소 높아짐. 2021년에는 14.1%로 약간 완화됨.
 -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같은 기간 13.0%에서 2016년에 13.6%까지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하여, 2021년에는 11.1% 수준이었음.
 - 전반적으로 2010년대 중반까지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에 비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이 약간씩 낮아 공적이전소득 및 지출에 의한 빈곤율 완화 효과가 존재하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았음.
 - 2018년부터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의 차이가 1%p 이상 나기 시작하면서 소득보장정책의 빈곤 완화 효과가 유지됨.

-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빈곤율로 악명²⁾이 높은 노인 인구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58.7%에서 2020년 57.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 인구의 빈곤율이 2011년 49.1%에서 2020년 38.9%로 40%대를 넘었으며, 2021년에는 37.7%로 감소 추세를 유지함.
-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의 차이, 즉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정책의 빈곤 완화 효과도 점차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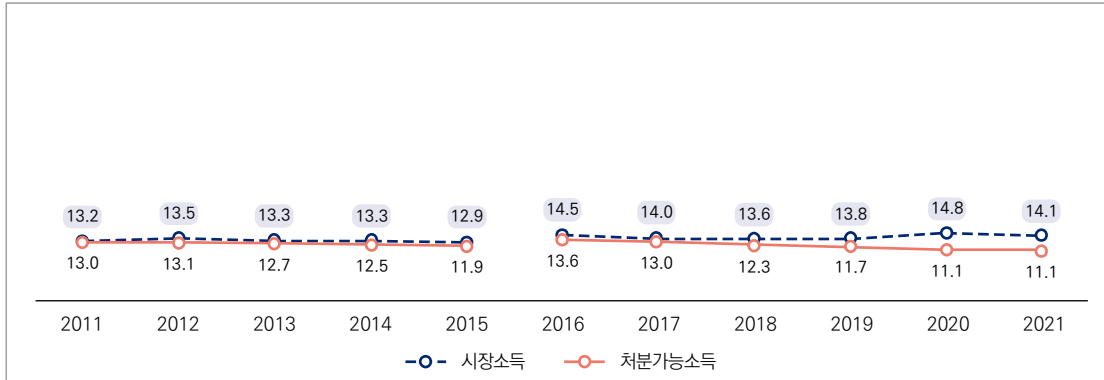
[그림 2-7] 2011~2021년 주요 연령집단별 빈곤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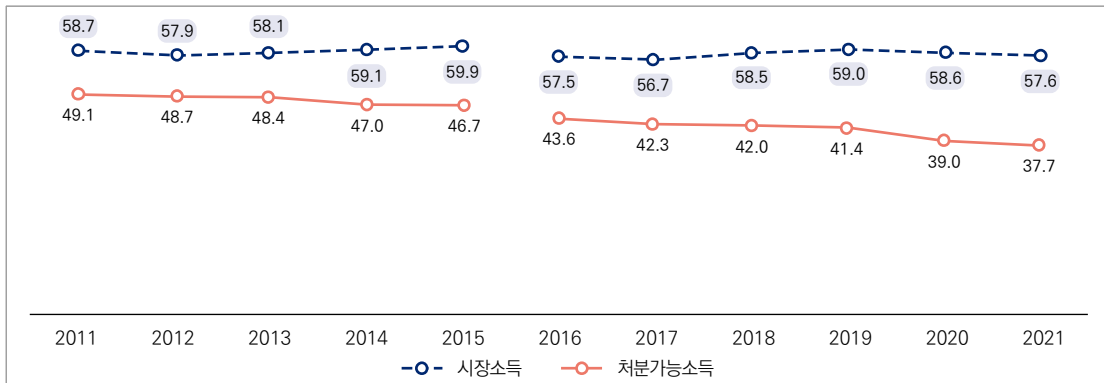


2) OECD 노인 빈곤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
 - OECD. (2023a). Poverty rate (indicator). Retrieved from doi: 10.1787/0fe1315d-en 2023.3.31.

35~64세 중장년



65세 이상 노인



주: 상대 빈곤율을 산출하기 위해 가구의 균등화된 소득이 균등화된 중위 처분가능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해당 연령대 가구원을 빈곤 인가로 정의함.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에 의한 2011~2015년 원자료는 행정자료가 보완된 미공개 자료이므로, 조사자료에 의한 공개 자료를 분석한 상기의 결과는 통계청에 의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여기에서 2011~2015년은 조사자료에 의한 것이고, 2016~2021년은 행정자료를 보완한 자료에 의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2.4. 노인 연령집단별 빈곤율

- 우리나라는 특히 노인의 빈곤율이 높으므로, 65~74세 초기 노인과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빈곤율을 각각 제시하였음.
 - 65~74세 노인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55.5% 수준에서 점차 감소해 2017년에 48.6%까지 감소했다가, 2018년에 다소 증가하여 2021년에는 49.2% 수준임.
 -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지난 10년 동안 점차 감소하여 2011년 44.6%에서 2021년 27.6%로 공적이전으로 인한 빈곤 완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75세 이상 노인 집단의 빈곤율은 초기 노인의 빈곤율보다 높은 수준임.
 -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0년 63.8%임. 7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지난 10년 동안 다소의 등락을 보이면서 증가하여, 2021년에는 67.7%에 이르러 후기 노인 10명 중 약 7명이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56.5%에서 2019년 55.1%까지 55~57% 범위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 51.2%로 전년 대비 3.9%p 감소한 이후 2021년에 51.0%를 유지하여, 다소 확대된 공적이전의 빈곤 완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8] 2011~2021년 노인 연령집단별 빈곤율

(단위: %)



주: 상대 빈곤율을 산출하기 위해 가구의 균등화된 소득이 균등화된 중위 처분가능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해당 연령대 가구원을 빈곤 인구로 정의함.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에 의한 2011~2015년 원자료는 행정자료가 보완된 미공개 자료이므로, 조사자료에 의한 공개 자료를 분석한 상기의 결과는 통계청에 의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여기에서 2011~2015년은 조사자료에 의한 것이고, 2016~2021년은 행정자료를 보완한 자료에 의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2.5. 주요 인구 집단 및 가구 유형별 빈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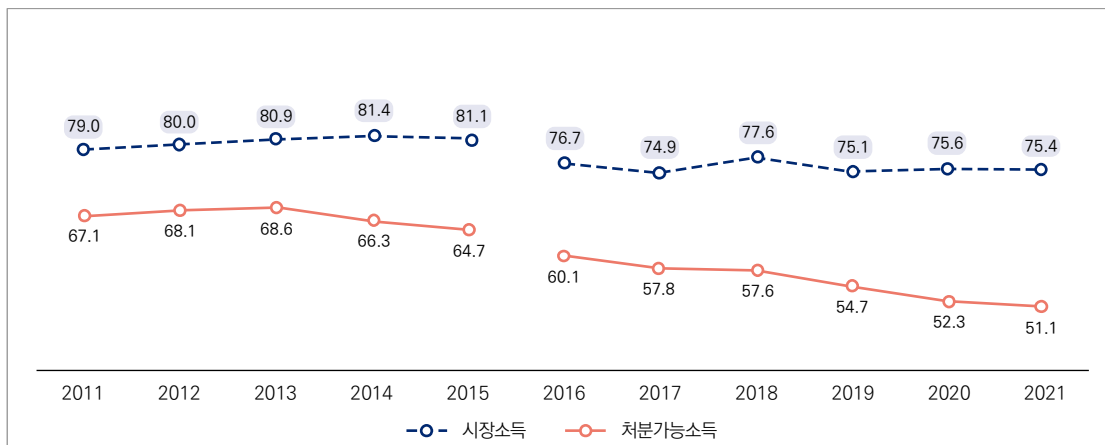
$$\text{유형별 빈곤율} = \frac{\text{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해당 유형 가구의 가구원 수}}{\text{전체 해당 유형 인구수}} \times 100$$

□ 노인가구는 가구원이 모두 65세 이상인 가구임.

- 2011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79.0%에 달하였으며, 2015년까지 8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였음.
- 2016년 76.7%로 약간 감소한 이후 등락을 보이다가, 최근 시점인 2021년에는 75.4% 수준을 보였음.
- 공적이전소득 및 지출이 고려된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가구 가구원의 빈곤율은 2011년 67.1%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노인가구 가구원 10명 중 7명 정도가 빈곤한 수준이었음.
- 2013년까지 68%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부터 약간씩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51.1%로 감소하였음.

[그림 2-9] 노인가구 가구원 빈곤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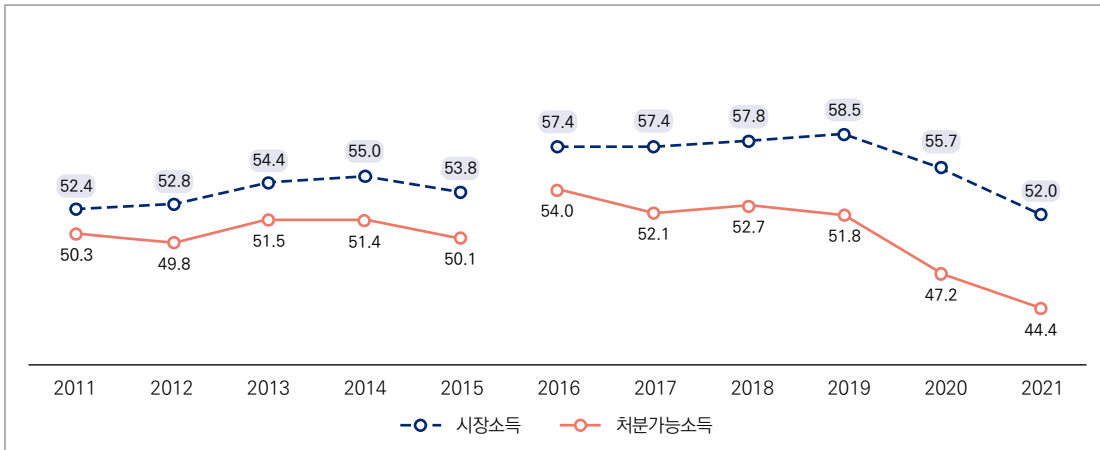
주: 상대 빈곤율을 산출하기 위해 가구의 균등화된 소득이 균등화된 중위 처분가능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해당 연령대 가구원을 빈곤 인구로 정의함.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에 의한 2011~2015년 원자료는 행정자료가 보완된 미공개 자료이므로, 조사자료에 의한 공개 자료를 분석한 상기의 결과는 통계청에 의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여기에서 2011~2015년은 조사자료에 의한 것이고, 2016~2021년은 행정자료를 보완한 자료에 의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1인 가구는 가구원 수가 1명인 가구로 정의하였음.

- 1인 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52.4%로 거의 절반 정도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까지 약간의 등락을 보이며, 2019년에는 58.5%까지 증가하였는데, 2020년부터 다시 빈곤율이 감소하기 시작해 2021년에는 52.0% 수준으로 나타남.
-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50.3%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약 2.1%p 차이에 불과했음.
- 이후 50% 내외를 유지하다가 2021년에는 44.4%로 약간 감소하여,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7.6%p 정도의 차이를 보임. 즉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 완화 효과가 다소 확대되었음.

[그림 2-10] 1인가구 가구원 빈곤율

(단위: %)



주: 상대 빈곤율을 산출하기 위해 가구의 균등화된 소득이 균등화된 중위 처분가능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해당 연령대 가구원을 빈곤 인구로 정의함.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에 의한 2011~2015년 원자료는 행정자료가 보완된 미공개 자료이므로, 조사자료에 의한 공개 자료를 분석한 상기의 결과는 통계청에 의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여기에서 2011~2015년은 조사자료에 의한 것이고, 2016~2021년은 행정자료를 보완한 자료에 의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장애인가구는 가구원 중 등록장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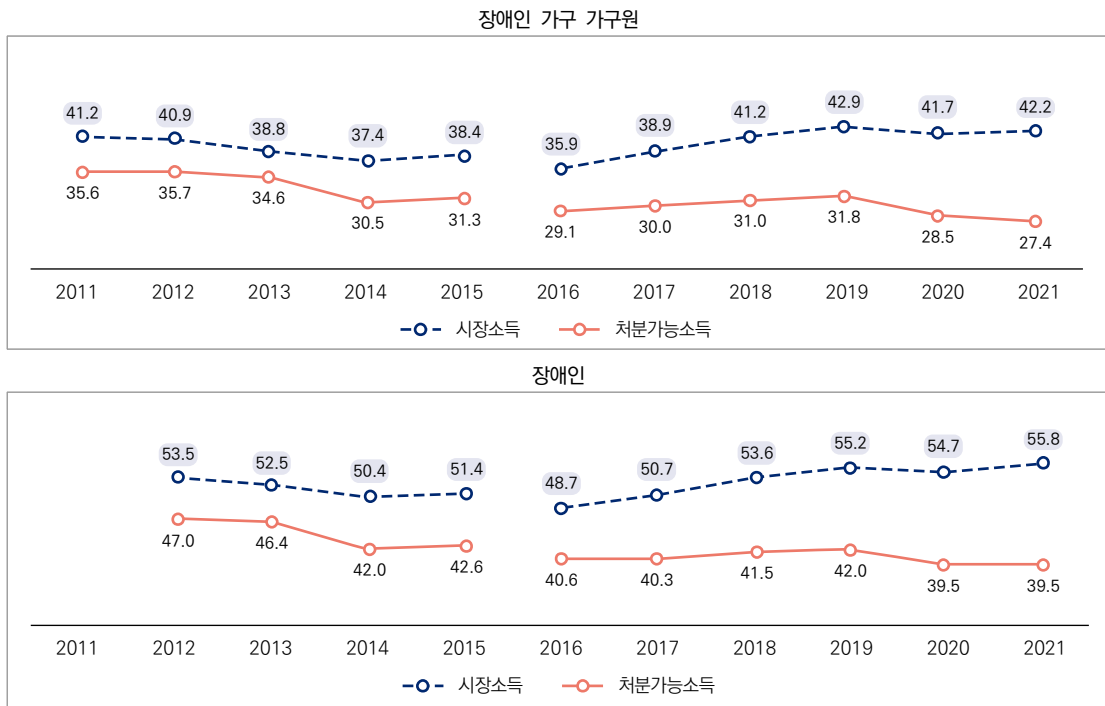
- 장애인 가구 가구원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41.2% 수준이었고, 약간씩 감소하여 2016년에는 35.9%로 낮아졌지만, 다시 증가하여 2021년 최근에는 42.2% 수준임.
- 반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같은 시기에 35.6%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는 29.1%로 줄어들었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소폭 증가하였지만, 2020년부터 다시 다소 감소하여 2021년 최근 27.4% 수준을 나타냄.

□ 등록장애인 개인의 빈곤율은 가구원 빈곤율에 비해 높음.

-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2012년부터 확인하면,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53.5%로 등록장애인 2명 중 1명 정도가 빈곤함.
- 2016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2021년 기준 55.8%에 이름.
-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2년 47.0%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40.3%로 줄었다가, 2019년까지 소폭 증가한 이후 2020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2021년 39.5%임.

[그림 2-11] 장애인 가구 빈곤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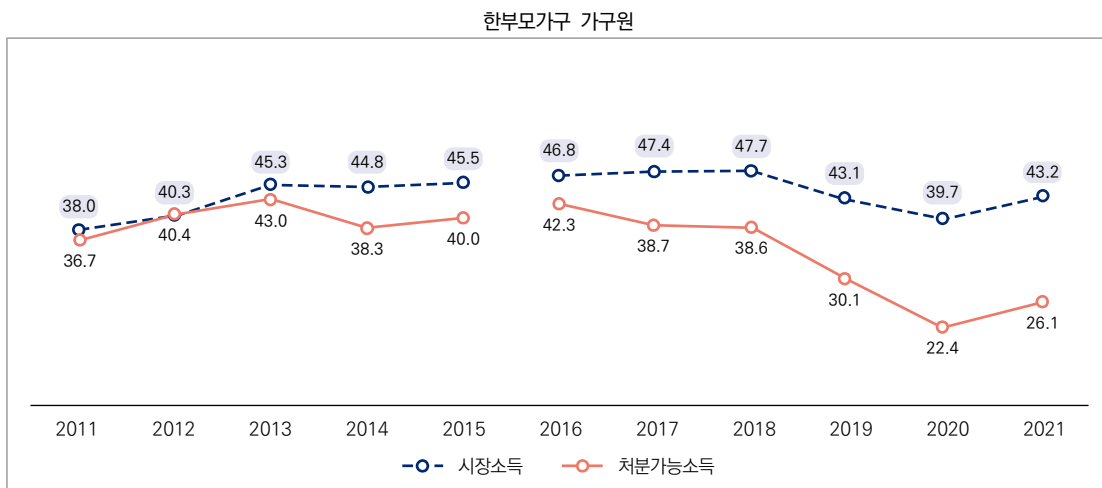


주: 상대 빈곤율을 산출하기 위해 가구의 균등화된 소득이 균등화된 중위 처분가능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해당 연령대 가구원을 빈곤 인구로 정의함.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에 의한 2011~2015년 원자료는 행정자료가 보완된 미공개 자료이므로, 조사자료에 의한 공개 자료를 분석한 상기의 결과는 통계청에 의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여기에서 2011~2015년은 조사자료에 의한 것이고, 2016~2021년은 행정자료를 보완한 자료에 의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한부모가구 가구원은 부모가 1명이고 18세 미만 미혼자녀 1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임.
- 이들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38.0%에서 오히려 증가해 2018년에는 47.7%에 이른 이후 2020년에는 39.7%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다시 43.2%로 증가하였음.
-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36.7%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에 비해 불과 1.3%p 작은 수준이었음.
- 2013년까지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이 소폭 증가한 이후 등락을 보이며 점차 감소하여 2020년 기준 빈곤율은 22.4%로 줄었지만,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추세와 유사하게 2021년 기준 26.1%로 다시 소폭 증가함.
- 이는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대비 17.1%p 정도 낮은 수준으로, 한부모가구 빈곤율을 완화하는 데에 공적이전 소득 및 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제가 일부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12] 한부모가구 가구원 빈곤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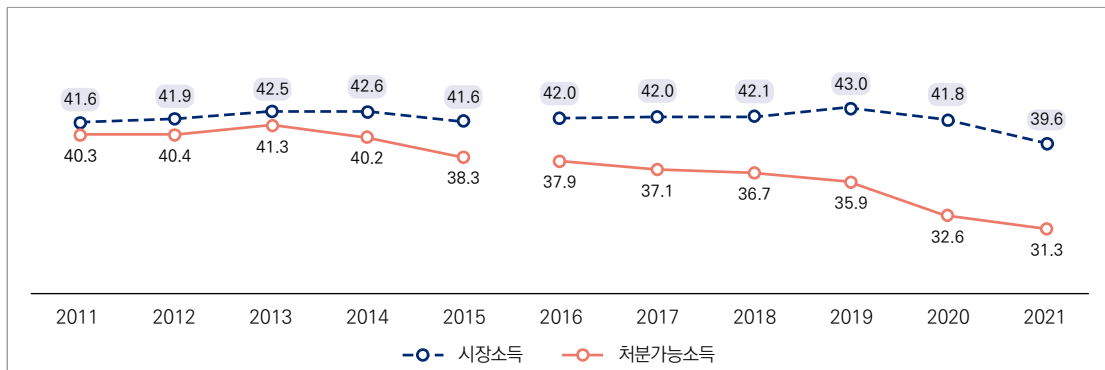
주: 상대 빈곤율을 산출하기 위해 가구의 균등화된 소득이 균등화된 중위 처분가능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해당 연령대 가구원을 빈곤 인구로 정의함.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에 의한 2011~2015년 원자료는 행정자료가 보완된 미공개 자료이므로, 조사자료에 의한 공개 자료를 분석한 상기의 결과는 통계청에 의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여기에서 2011~2015년은 조사자료에 의한 것이고, 2016~2021년은 행정자료를 보완한 자료에 의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마지막으로, 가구주 성별이 여성인 여성가구주 가구 가구원의 빈곤율을 확인하였음.

- 2011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41.6%로 나타났는데, 2020년까지 42%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기준 39.6%로 다소 감소하였음.
- 반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같은 기간 40.3%에서 2014년까지 40%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차 감소하여 2021년에는 31.3% 수준으로 공적이전소득과 지출의 빈곤율 완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13] 여성가구주 가구 가구원 빈곤율

(단위: %)



주: 상대 빈곤율을 산출하기 위해 가구의 균등화된 소득이 균등화된 중위 처분가능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해당 연령대 가구원을 빈곤 인구로 정의함.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에 의한 2011~2015년 원자료는 행정자료가 보완된 미공개 자료이므로, 조사자료에 의한 공개 자료를 분석한 상기의 결과는 통계청에 의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여기에서 2011~2015년은 조사자료에 의한 것이고, 2016~2021년은 행정자료를 보완한 자료에 의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3.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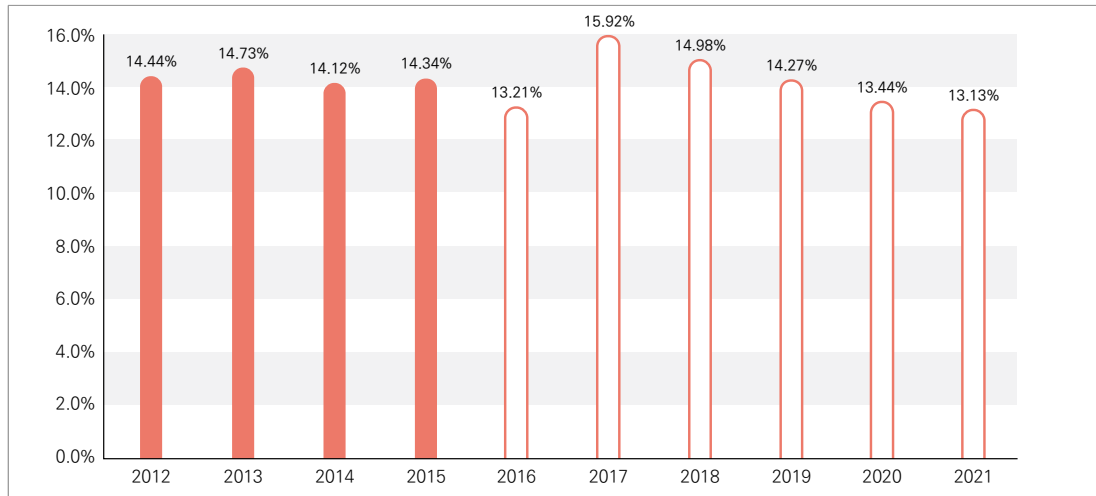
3.1. 근로빈곤율

$$\text{근로빈곤율} = \frac{\text{가구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15-64세 취업 인구수}}{\text{15-64세 취업 인구수}} \times 100$$

- 가구 소득: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 빈곤선: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의 60%
- 취업 인구: 조사 시점에 고용 상태에 있는 인구(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2017년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근로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우리나라 근로빈곤율은 2017년 15.92%까지 상승한 이후, 매년 조금 줄어들어 2021년에는 13.13%까지 낮아졌음.
 - 2021년 근로빈곤율은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2012~2021년 사이 근로빈곤율은 일반적으로 13~14% 수준을 유지함.
 - 2012년 우리나라 근로빈곤율은 14.44%를 나타낸 후, 2015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6년에는 1%p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여 13.21%를 줄어듦.
 - 2017년에는 전년도보다 2.7%p 이상 상승하며 16%대에 육박했지만,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8년과 2019년에는 14%대, 2020년과 2021년에는 13%대를 기록하였음.

[그림 2-14] 근로빈곤율 추이(2012~2021년)



주: 2012~2015년은 조사자료에 의한 것이고, 2016~2021년은 행정자료를 보완한 자료에 의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3.2. 저임금근로자 비율

$$\text{저임금근로자 비율} = \frac{\text{월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 임금근로자 수}}{\text{전체 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13년 24.7%를 기록한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15.6%까지 낮아짐.

□ 남성과 여성의 저임금근로자 비율 격차는 큼.

○ 남성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12년 16.5%에서 2021년 10.2%로 줄어든 반면, 여성의 경우 2012년 37.3%였던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2018년까지 30%대를 유지했음.

○ 2021년 들어 여성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24.3%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남성과 비교하면 2.5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2-1〉 저임금근로자 비율 추이(2012~2021년)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23.9	24.7	23.7	23.5	23.5	22.3	19.0	17.0	16.0	15.6
남성	16.5	16.6	15.4	15.2	15.3	14.3	12.1	11.1	10.5	10.2
여성	37.3	38.9	37.8	37.6	37.2	35.3	30.0	26.1	24.7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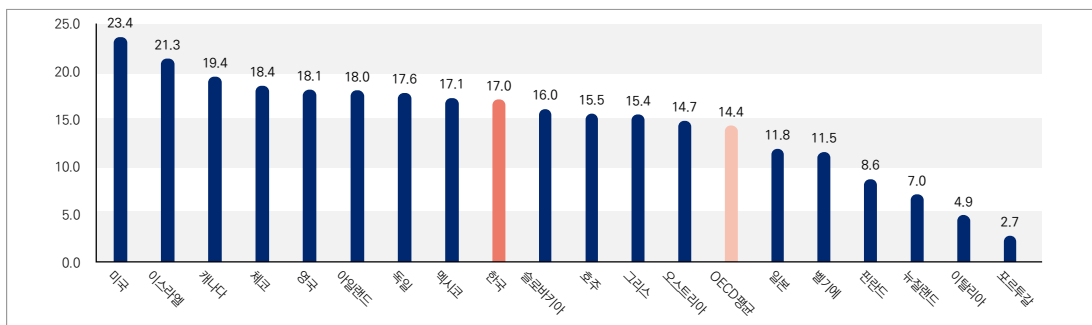
자료: OECD. (2022a).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 Incidence of low pay.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EC_I 2022.10.30.

□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을 웃돌고 있음.

○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 평균은 14.4%였지만, 우리나라는 17.0%로 2.6%p 높음.

〔그림 2-15〕 OECD 주요 국가 저임금근로자 비율(2019년)

(단위: %)



자료: OECD. (2022a).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 Incidence of low pay.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EC_I 2022.10.30.

3.3. 장기실업률

$$\text{장기실업률} = \frac{\text{1년 이상 실업자}}{\text{전체 실업자}} \times 100$$

- 우리나라 장기실업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2021년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장기실업률은 1.2%로 나타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음.
 - 한국은 매년 1% 내외의 장기실업률을 기록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 장기실업률 데이터가 갖는 한계를 고려하여 보충적인 지표 관리가 필요함.
 - 장기실업의 조작적 정의와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 사이의 괴리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기실업률이 과소 집계되는 경향이 큼.
 - 따라서 장기실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마련을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준비자와 쉬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함께 검토해야 함.

〈표 2-2〉 장기실업률 추이(2012~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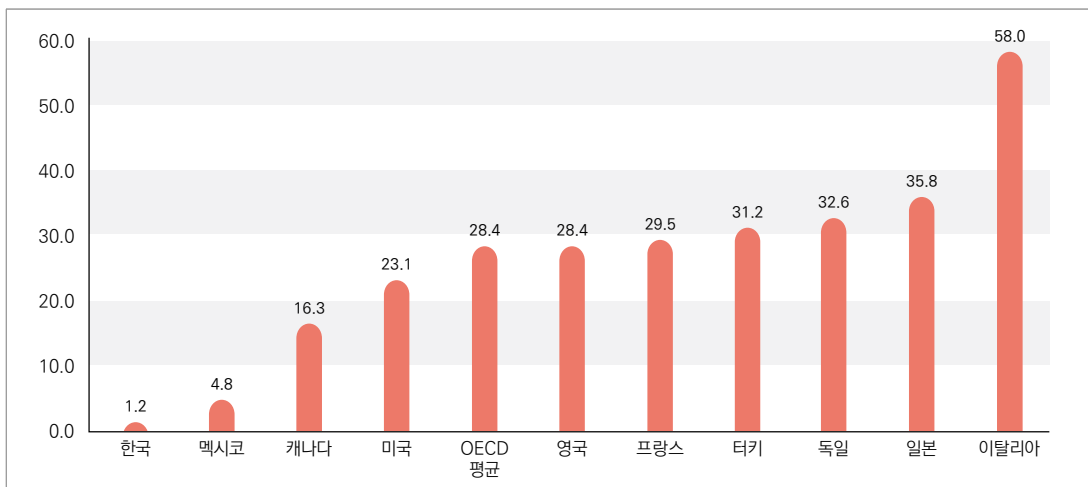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0.3	0.4	0.2	0.4	0.9	1.3	1.4	0.9	0.6	1.2

자료: OECD. (2022b). Incidence of unemployment by duration.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UR_D 2022.10.30.

[그림 2-16] OECD 주요 국가 장기실업률(2021년)

(단위: %)



자료: OECD. (2022b). Incidence of unemployment by duration.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UR_D 2022.10.30.

3.4. 취업준비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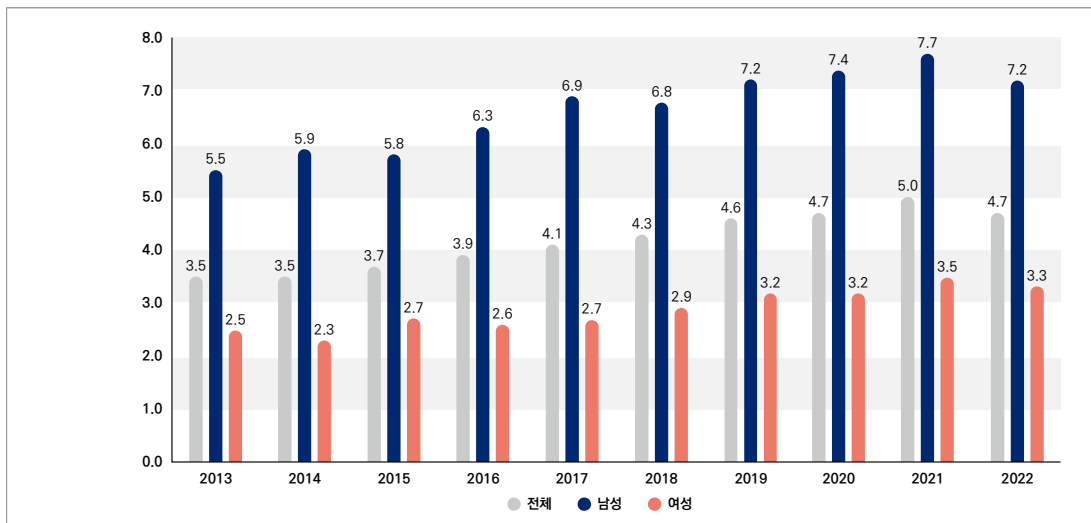
취업준비자 비율 = (취업준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수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 100
 - 취업준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항목인 비경제활동상태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과 '그 외의 취업준비'에 해당하는 활동

-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준비자 비율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 감소하였음.
 - 2013년 3.5%였던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준비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 5.0%까지 늘었음.
 - 2022년에는 취업준비자 규모가 763천 명으로 집계되어 비경제활동인구 중 4.7%로 나타나 2021년보다 0.3%p 감소하였음.

- 남성 취업준비자 비율이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음.
 - 통계적으로 남성 취업준비자 비율은 여성보다 매년 높게 나타남.
 - 2022년 남성 취업준비자는 423천명, 여성 취업준비자는 340천명으로 집계되었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비율은 각각 7.2%와 3.3%였음.

[그림 2-17]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비율 추이(2012~2021년)

(단위: %)



자료: 통계청. (2023.4.12.a). 성/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45S&conn_path=13 에서 2023.4.1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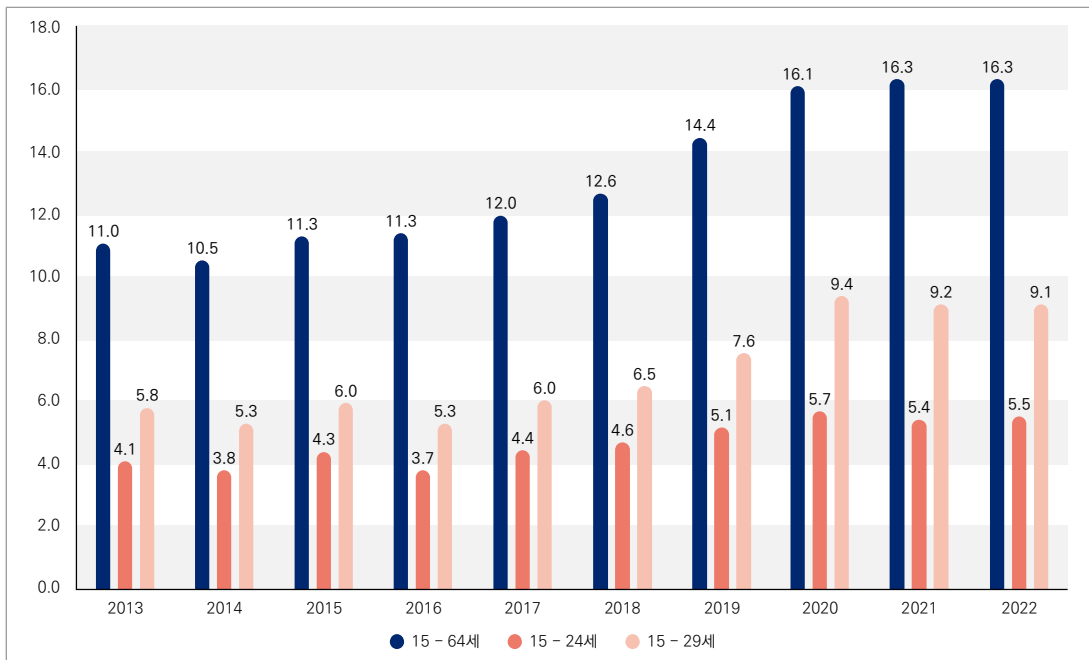
3.5. 쉬고 있는 인구 비율

$$\text{쉬고 있는 인구 비율} = (\text{15~64세 인구 가운데 쉬고 있는 청년} / \text{15~64세 비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15~64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고 있는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3~2016년 기간 동안 15~64세에 해당하는 쉬고 있는 인구 비율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12.0% 미만이었지만,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20년에 16%대에 진입하였고, 2021년과 2022년에는 모두 16.3%를 기록함.
- 청년층 역시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고 있는 인구 비율이 증가함.
 - 15~24세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고 있는 비율은 3.7%였던 2016년 이후 상승하여 2020년에는 5.7%를 기록한 후,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5.4%와 5.5%를 나타냄.
 - 15~29세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2016년 5.3% 수준이었지만, 이후 증가하여 2020년에 9.4%까지 늘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9.2%와 9.1%를 나타냄.

[그림 2-18] 15~64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고 있는 인구 비율 추이(2012~2021년)

(단위: %)



자료: 통계청. (2023.4.12.b). 연령/활동상태별(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47S&conn_path=13 에서 2023.4.15. 인출.

4. 소득보장정책 수요 및 공급

4.1.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심의와 의결을 통해 매년 7월에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은 처음 도입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4인 가구) 2015년 4,222,533원 → 2020년 4,749,174원 → 2023년 5,400,964원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대비 5.47% 증가했으며, 역대 전년도 대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 개편된 산출방식을 최초로 반영하여 결정된 값임(보건복지부, 2022.7.29.)

〈표 2-3〉 기준 중위소득 추이(2015~2022년)

(단위: 원/월)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5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2016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2017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2018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2019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202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22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자료: e-나라지표. (2022.8.1.). 기준 중위소득 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에서 2023.3.22. 인출.

4.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자로서 일반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의 합
-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전 국민 인구수) × 10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와 수급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도 말부터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으로 수급자 수와 수급률이 증가했음.

○ '11년 약 147만 명(2.94%) → '14년 약 133만 명(2.6%) → '15년 약 165만 명(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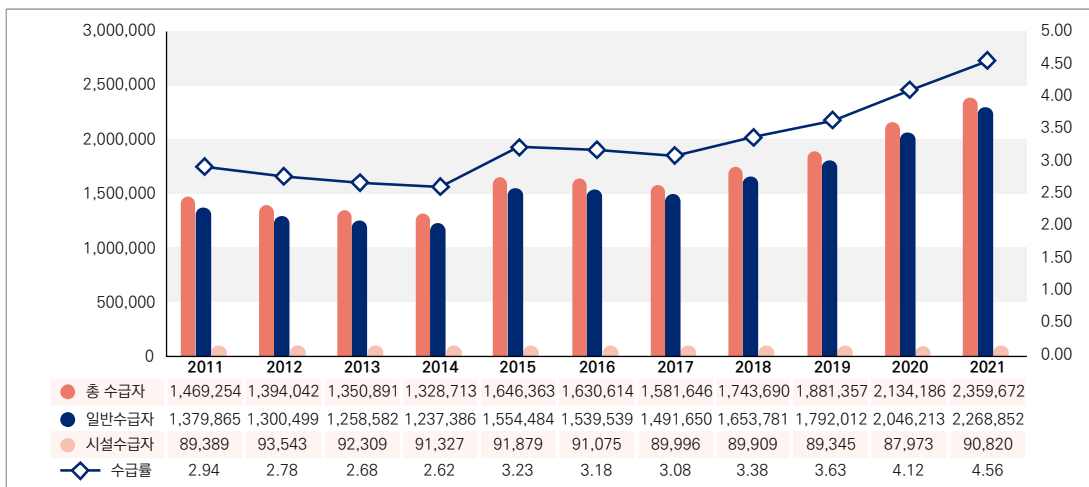
□ 이후 2017년도까지 완화되었지만, 2018년도부터 수급자 수와 수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17년 약 158만 명(3.08%) → '18년 약 174만 명(3.38%) → '21년 약 236만 명(4.56%)

○ 이러한 증가 추세는 빈곤층 규모의 증가로도 볼 수 있지만, 2017년도 말부터 진행되어온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등의 제도 개선으로 인한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림 2-1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추이(2011~2021년)

(단위: 명, %)



자료: 1) 통계청. (2022.7.2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국민기초생활수급자총괄(일반, 시설)- 시도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1&conn_path=I3에서 2022.10.28. 인출.

2) e-나라지표. (2022).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에서 2022.10.28. 인출.

4.3. 기초연금 수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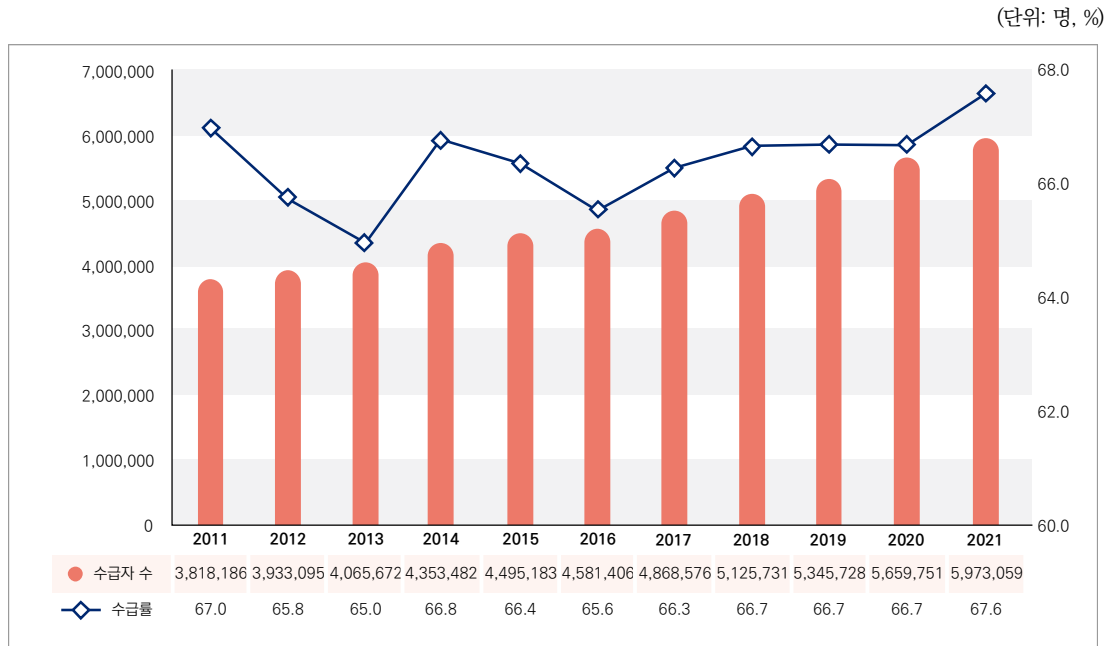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 기초연금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수급자 수
-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 (65세 이상 노인인구 ÷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 × 100
- 65세 이상 인구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거주자 및 거주불명자) 현황 기준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기초노령연금 시기인 2011년부터 기초연금으로 개편한 이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급자 수도 증가하고 있음.

○ 노령연금의 수급률은 2011년 67.0%에서 2013년 65.0%로 감소했지만, 2014년도부터 기초연금으로 개편됨에 따라 수급률이 68%로 증가함.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2-20]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추이(2011~2021년)



자료: 1) 2011년도: 보건복지부. (2012). 2011 보건복지 통계 연보. 보건복지부. p. 382.
 2) 2012~2021년도: 보건복지부. (2022b).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p. 428.

4.4. 긴급복지지원 지원 건 수

긴급복지지원 지원 건수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시설 이용, 연료비, 해산 및 장제비 등)에 대한 지원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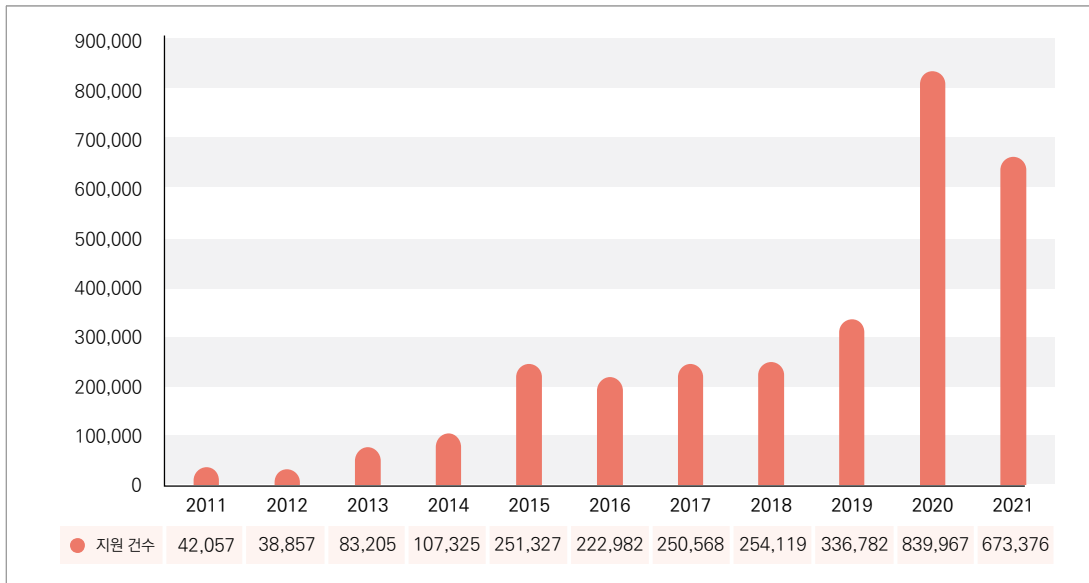
□ 2010년도 초기에는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건수가 낮았으나, 증감을 반복하면서 지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20년에는 약 84만 건으로, 2019년(약 34만 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함.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에 따른 위기 가구 증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21년에는 약 67만 건 다소 감소했지만 코로나 발생 이전(2019년 이전)과 비교하면 긴급 복지 지원을 이용하는 가구의 규모는 여전히 큰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1] 긴급복지지원 지원 건수 추이(2011~2020년)

(단위: 건수)



자료: 보건복지부. (2022b).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p. 389.

4.5. 공적연금 수급률

- 연금별 수급자 수 = 각 연금의 노령/장애/유족연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 수
-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 =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수 ÷ 65세 이상 추계 인구)×100

-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자 수 추이(2011~2021년)를 보면, 모든 연금에서 2011년도 대비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수급자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은 2011년 약 318만 명에서 2021년에는 약 610만 명으로 증가함. 공무원연금도 약 33만 명(2011년)에서 약 60만 명(2021년)으로 증가했으며, 이외에도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도 수급자 규모가 크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림 2-22]은 65세 이상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 수와 65세 이상 노인 수급률을 나타낸 것임.
-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수와 수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31.8%에서 2021년 55.1%로 약 24% 이상 증가했음.
- 이러한 수급률의 증가는 국민연금의 수급자 규모의 증가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비중이 크진 않지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표 2-4〉 연금별 수급자 수 추이(2011~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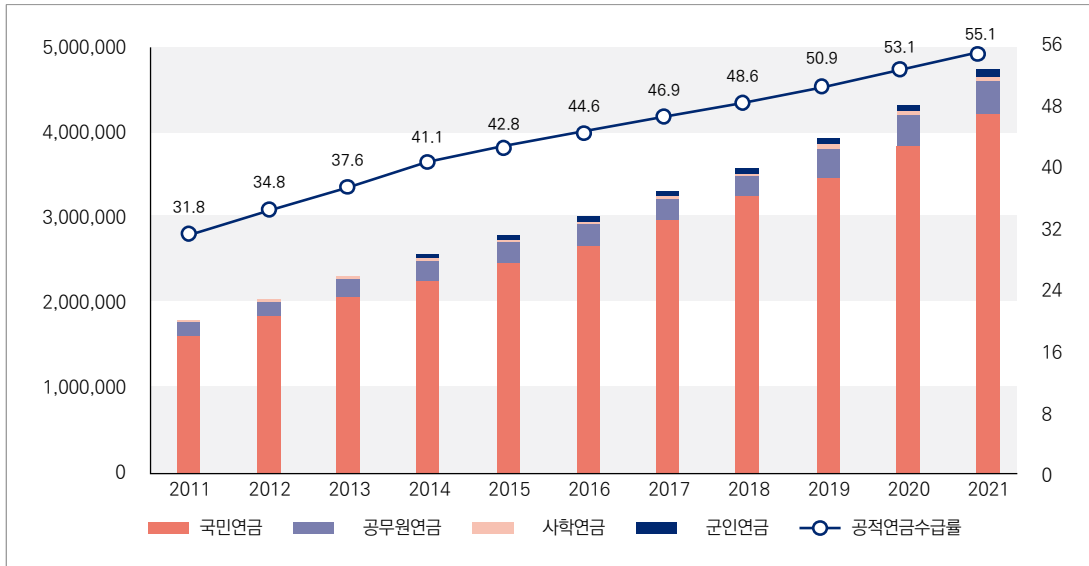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011	3,184,601	326,509	40,576	78,103	1,094
2012	3,518,090	348,493	44,357	80,262	1,173
2013	3,653,113	366,482	48,407	82,313	1,256
2014	3,769,420	395,630	53,040	84,565	1,429
2015	4,051,372	426,068	59,059	87,134	1,545
2016	4,384,746	452,942	63,782	89,098	1,652
2017	4,716,226	480,096	69,218	91,071	1,746
2018	4,794,376	506,550	75,914	93,126	1,868
2019	5,190,010	535,992	83,176	95,282	1,986
2020	5,616,205	567,770	90,989	97,153	2,157
2021	6,099,205	599,485	98,730	99,454	2,321

자료: 1) 국민연금공단. (2022). 2021년 제34호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 p.34.
 2) 공무원 연금공단. (2022.10.13.). 공무원연금공단_연금 수급자 추이. <https://www.data.go.kr/data/15052972/fileData.do> 에서 2022.10.25. 인출.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2). 2021년 사학연금 통계연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p.98.
 4) 국방부. (2022.8.9.). 군인연금 현황 : 군인연금 수급인원 현황. <https://opendata.mnd.go.kr/openinf/sheetview2.jsp?infid=OA-9534> 에서 2022.10.25. 인출.
 5) 보건복지부. (2022b).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p. 408.

[그림 2-22]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2011~2021년)

(단위: 명, %)



주: 1) 각 연금별 노령연금 및 장애(장해, 상이)연금, 유족(퇴직 유족)연금 수급자의 합계임.

2) 군인연금은 2014년도부터 포함됨.

자료: 1) 통계청. (2015). 2015 고령자통계-통계표.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1/index.board?bmode=read&bSeq=&aSeq=34856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Txt=%EA%B3%A0%EB%A0%B9%EC%9E%90 에서 2022.10.2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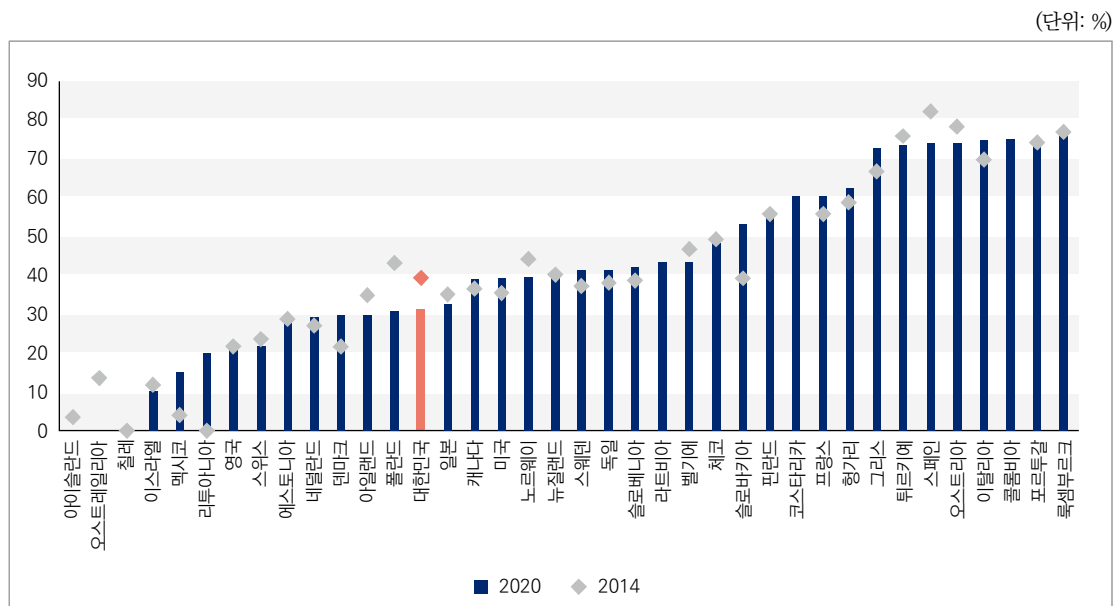
2) 통계청. (2022). 2022 고령자통계. 통계청. p.75.

4.6.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text{공적연금 소득대체율} = (\text{의무적 공적 연금액} \div \text{은퇴 전 평균 소득}) \times 100$$

- OECD 회원국의 총연금소득대체율(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s)을 활용했으며, 이에 대해 살펴보면 [그림 2-23]과 같음.
- 총연금소득대체율 중 의무적·공적 연금(Mandatory public)만 계산한 소득대체율임.
- OECD의 공적연금은 의무적 기초보장(기초연금)과 의무적 소득비례연금(공적, 사적) 중 공적 소득비례연금을 말함.
 - 한국의 경우 공적 소득비례연금으로 국민연금이 해당되며, 기초연금은 사회부조로 간주하여 포함하지 않음(오건호, 2022.2.28.).
-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31.2%로 2014년도 소득대체율(39.3%)에 비해 감소했으며, 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 25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함.
- OECD 회원국 중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76.6%), 포르투갈(74.9%)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침.

[그림 2-23] OECD 공적연금 소득대체율(2014/2020)



주: 1) 은퇴 전 소득이 평균 수준인 자 기준임.
 2) 2014년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는 데이터 없음.
 자료: 1) 2014년: OECD. (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Publishing. p.141.
 2) 2020년: OECD. (2021). Pensions at a Glance 2021. OECD Publishing. p.141.

5.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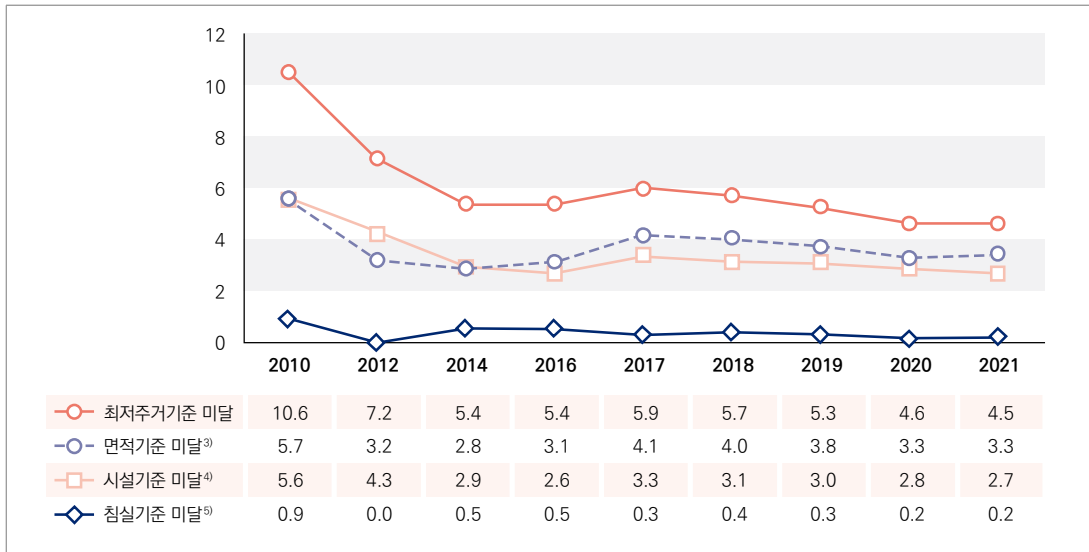
5.1.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text{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 (\text{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 \text{총 가구 수}) \times 100$$

-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주거실태조사³⁾ 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조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총가구 대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을 확인하였음.
- 2021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가구의 4.5%로 2010년의 12.7%에 비해서는 6.1%p, 2020년의 4.6%에 비해서는 0.1%p 감소하였음.
- 최저주거기준 항목별로는 면적기준 미달가구 3.3%, 시설기준 미달가구 2.7%, 침실기준 미달가구 0.2%임.⁴⁾

[그림 2-24] 2010년 이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기준별)

(단위: %)



주: 1) 본 지표는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11.05.27)에 따른 기준에 따름.

2) 비율은 주거실태조사 결과이며, 주거실태조사는 2006년 이후 격년마다 조사, 2017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음.

3) 가구원 수별 주거면적은 1인 14㎡, 2인 26㎡, 3인 36㎡, 4인 43㎡, 5인 46㎡, 6인 ㎡ 미만인 가구

4)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 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5) 가구원 수별 방 수가 1인 1개, 2인 1개, 3인 2개, 4인 2개, 5인 3개, 6인 4개 미만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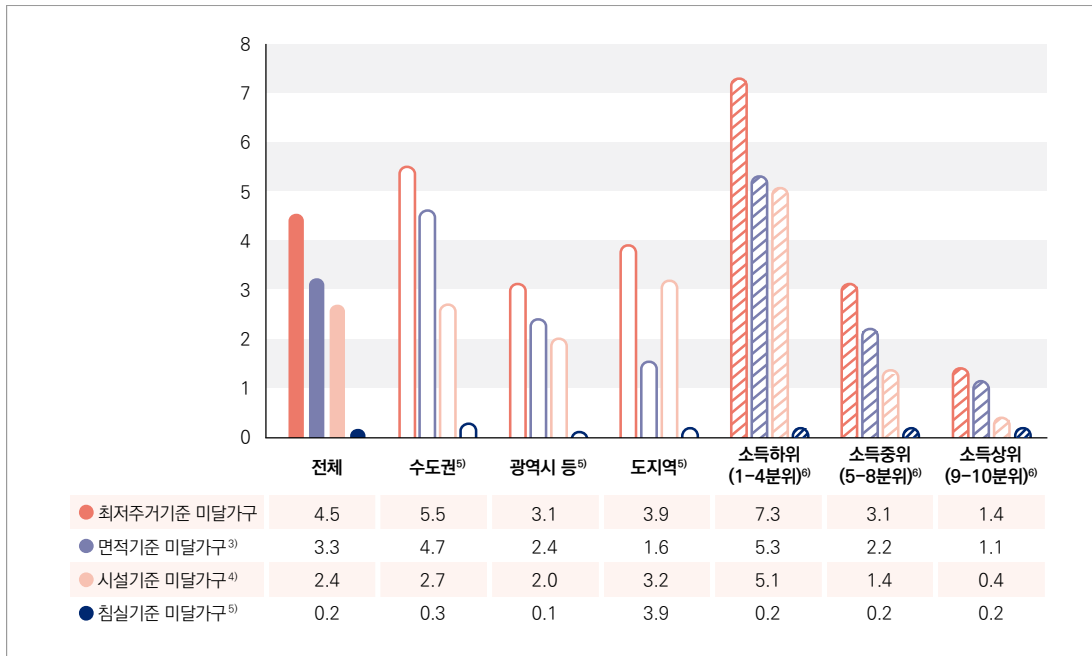
자료: 국가지표체계. (2023a).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191#> 에서 2023.03.30. 인출.

- 3) 「주거기본법」 제20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주거실태조사 항목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을 포함하고 있음.
- 4)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통계는 구체적 기준 설정 및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집계되고 있지 않음.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5.5 %, 광역시 등 3.1%, 도지역 3.9%로 수도권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 하위 (1~4분위) 7.3%, 소득 중위 (5~8분위) 3.1%, 소득 상위(9~10분위) 1.4%를 나타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미달가구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25] 2021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지역별, 소득수준별)

(단위: %)



- 주: 1) 본 지표는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11.05.27)에 따른 기준에 따름.
 2) 비율은 주거실태조사 결과이며, 주거실태조사는 2006년 이후 격년마다 조사, 2017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음.
 3) 가구원 수별 주거면적은 1인 14㎡, 2인 26㎡, 3인 36㎡, 4인 43㎡, 5인 46㎡, 6인 ㎡ 미만인 가구
 4)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 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5) 가구원 수별 방 수가 1인 1개, 2인 1개, 3인 2개, 4인 2개, 5인 3개, 6인 4개 미만인 가구
 6)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등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도지역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임.

자료: 국가지표체계. (2023a).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191#> 에서 2023.03.30. 인출.

5.2. 주택임대료 부담률

$$\text{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text{중위 월 임대료} / \text{중위 월 가구 소득}) \times 100$$

□ 다음 그림에서 보는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은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드러내는 대리지표의 수준으로, 주택임대료 비율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다는 의미임.

□ 2021년 전국 기준 주택임대료 부담률은 15.7%로 시기별 흐름을 살펴보면 2010년 19.2%에서 2014년 20.3%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추세로 전환하여 2021년에는 15.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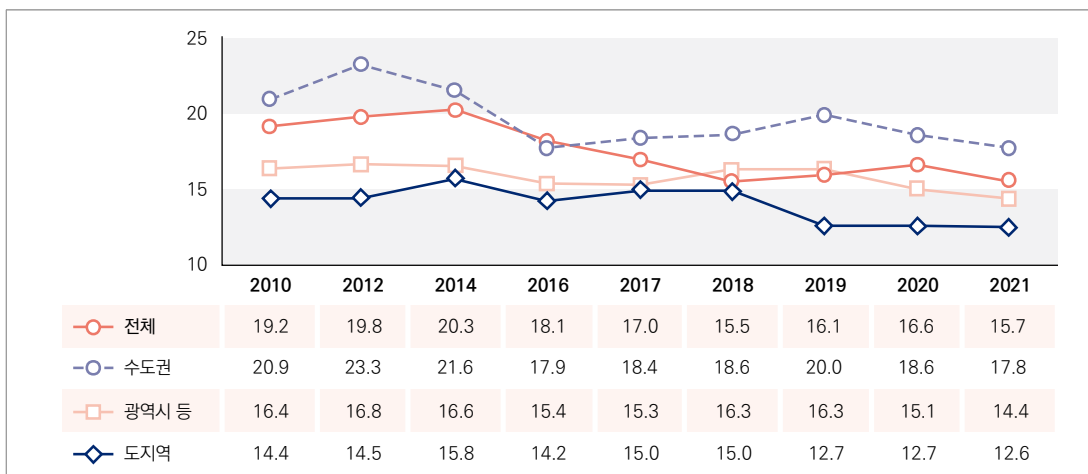
○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수도권 17.8%, 광역시 등 14.4%, 도지역 12.6%로 수도권이 광역시 등 및 도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상위(9~10분위) 19.6%로 높은 편이며 하위(1~4분위) 18.0%, 중위(5~8분위) 16.0% 순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일관성 있는 분포를 나타내고 있지 않음.

○ 다만 시기별로 소득 하위는 크게 낮아졌고 소득 중위는 다소 낮아졌으며 소득 상위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2-26] 2010년 이후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부담률 (지역별)

(단위: %)



주: 1) RIR 비율은 주거실태조사 결과이며, 주거실태조사는 2006년 이후 격년마다 조사, 2017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음.

2) 보증금은 한국부동산원 전구주택가격동향의 '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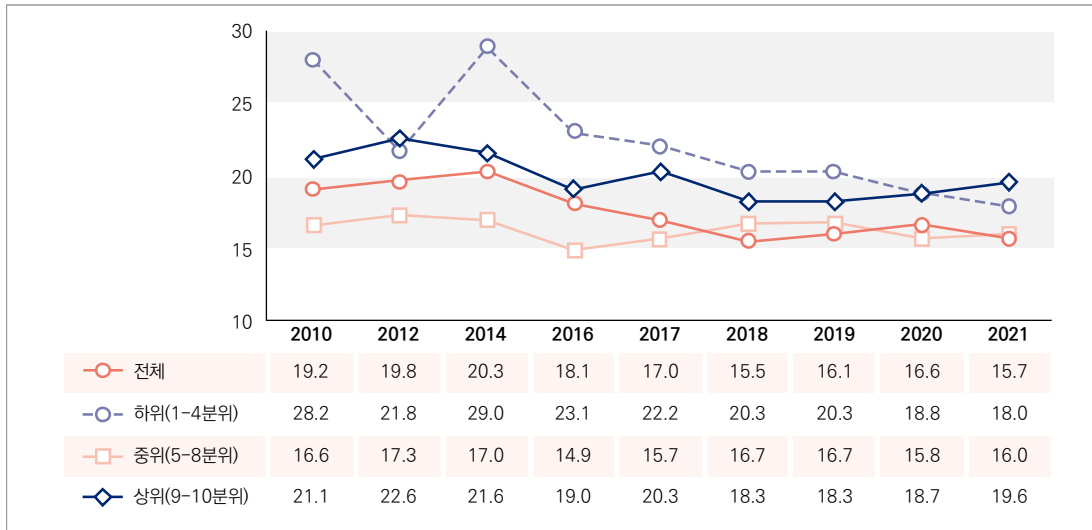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등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도지역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임.

4) 가구 총소득으로, 세금 등을 제외한 월평균 실수령액임.

자료: 국가지표체계. (2023b).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30&clasCd=10&idxCd=F0189&upCd=8#>에서 2023.03.30. 인출.

[그림 2-27] 2010년 이후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부담률 (소득수준별)

(단위: %)



주: 1) RIR 비율은 주거실태조사 결과이며, 주거실태조사는 2006년 이후 격년마다 조사, 2017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음

2) 보증금은 한국부동산원 전구주택가격동향의 '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였음.

3) 가구 총소득으로, 세금 등을 제외한 월평균 실수령액임.

자료: 국가지표체계. (2023b).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30&clasCd=10&idxCd=F0189&upCd=8#>에서 2023.03.30. 인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II .

평가 및 시사점

-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 주거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고 축적하는 소득과 자산으로 이루는 경제적 기반으로 이루어짐.
 - 경제적으로 취약한 빈곤층과 격차는 삶의 질을 저해하여, 소득보장정책을 통해 대응함.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최근 추이를 지표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특히 더 취약한 인구 집단을 발견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위치와 특수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가계, 소득분배, 경제활동, 소득보장정책과 주거의 다차원적인 경제적 기반을 지표의 추이와 국제비교를 통해 확인하였음.

- 가계는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차원적인 삶의 질을 누리는 기본적인 가계 단위임.
 - 2007~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부터 최근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이 가구에서 누리는 평균적인 경제적 삶의 수준은 개선되고 있음.
 -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위소득이 평균소득보다 작게 나타나,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 집단의 규모가 고소득자 집단에 비해 두터운 상황임.
 - 소득 구성에 있어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보장기여금과 세금 등 공적이전지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했지만, 반대급부로서 공적이전소득이 대폭 증가하여 소득보장정책의 확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 가구 지출을 구성하는 요소 중 식료품비와 의료비의 증가율이 다소 높고,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등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교육비는 다소 감소하였음.
 - 자산 보유비율이 지난 10여 년 동안 100%에 이르러 우리나라 거의 모든 가구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 수준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가구 소득과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중위자산이 평균자산보다 작게 나타나, 자산 중간층 이하 저자산 계층 집단의 규모가 고자산 계층에 비해 두터움.
 - 2011년부터 지난 10여 년 동안 65% 내외의 가구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부채 수준 또한 자산 증가 추세와 유사하게 점진적으로 증가해왔음.

- 우리나라의 빈곤과 불평등은 OECD 가입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전통적인 복지국가인 북유럽 국가의 빈곤과 불평등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복기하면,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소득보장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 지난 10여 년 동안의 추세를 보면,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19.6% 이후 2012년에 19.0%로 다소 완화되었지만 2020년 21.3%까지 점진적으로 악화되다가 2021년에 20.8%로 다소 완화됨.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음.

- 지니계수로 보는 불평등은 2011년(0.418)부터 2015년(0.396)까지 점진적으로 완화되다가 다소 악화되어 2021년 최근까지 0.405 수준을 유지함.
- 하지만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을 고려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과 지니계수는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임. 즉, 빈곤과 불평등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데에 소득보장정책이 작동한 것으로 보임.

□ 빈곤율을 하위 인구집단별로 분해하면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의 소득보장정책에 의한 빈곤 완화 효과와 함께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집단이 확인됨.

○ 연령대별로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청소년과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의 빈곤율은 1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35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의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4% 내외, 처분가능소득 기준 약 11% 수준을 유지함.

○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2011년 이후 시장소득 기준 60%에 가까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이 고려된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49.1%에서 2021년 37.7%로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어 노인을 표적(targeting)으로 하는 소득보장정책이 기능하는 것으로 보임.

- 노인 빈곤율을 64세부터 74세까지의 초기 노인 집단과 75세 이상 후기 노인 집단으로 분해하면, 초기 노인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55.5%에서 2021년 49.2%로 점진적으로 완화됨.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44.6%에서 2021년 27.6%로 대폭 완화됨.
- 하지만 75세 이상 노인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63.8%에 달하고 2021년에는 68.7%로 오히려 악화됨.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같은 기간 56.5%에서 51.0%로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후기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한 상태임.

○ 주요 취약계층 유형별 빈곤율을 보면, 가구원이 모두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가구원의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2015년 8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가 2021년에는 75.4%로 매우 높은 수준임.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67.1%에서 2021년 51.1%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노인가구 가구원 2명 중 1명이 빈곤한 상태임.

○ 1인 가구 빈곤율도 높음. 2019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58.5%에 이르렀다가 2021년에 52.0%로 다소 완화되었음.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50.3%였다가 2019년 51.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차 감소하여 2021년 기준 44.4%로 완화됨.

- 장애인 가구 가구원, 장애인, 한부모가구 가구원, 여성가구주 가구 가구원의 빈곤율도 시장 소득 기준 30% 후반대부터 50% 중반까지 높은 편인데,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21년 최근 20% 후반대부터 30% 후반대까지 완화되어 소득보장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빈곤한 근로빈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최근 몇 년 동안 근로빈곤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2010년대 수준과 비교하면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빈곤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인 저임금근로가 최근 크게 개선되었지만, 이러한 요인이 근로빈곤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빈곤 발생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요청됨.
- 장기실업률이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및 쉬고 있는 인구의 비중을 초점을 맞추어 장기실업자 규모를 모니터링하고, 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마련이 요청됨.
 - 장기실업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기실업자는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이 지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움.
 -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질적으로 오랜 실업 상태에 있다고 분류될 소지가 큰 취업준비자와 쉬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따라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장기실업자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육아, 가사, 연로, 심신장애 등 다른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취업준비자나 쉬고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는 미비하므로 이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고려도 요청됨.
-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공표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공적연금 등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 규모 및 수급률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수급자 규모 및 수급률 증가 추세는 각 제도의 대상자 포괄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된 정책 개선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우리 사회의 위기 혹은 노인 인구수 등 지원대상 집단 자체의 변화로 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 주요 소득보장정책으로서 기여금을 기반으로 하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가입국 대비 낮은 편임.

- 하지만 공공부조, 기초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지표로 보는 실태가 제한적일 수 있음.
- 최저주거기준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기존의 기준을 조건으로 주거의 물리적 조건이 향상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최근 7년 동안 4~5%대에서 더 낮아지고 있지 않음을 감안할 때 주거상향 및 물리적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계속될 필요가 있음



1. 국내 문헌

- 국민연금공단. (2022). 2021년 제34호 국민연금통계연보. 전주: 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
- 보건복지부. (2012). 2011 보건복지 통계 연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a). 통계로 본 2021년 기초연금.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b).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 세종: 보건복지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2). 2021년 사학연금 통계연보. 나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통계청. (2022). 2022 고령자통계. 대전: 통계청.

2. 해외 문헌

- OECD. (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21). *Pensions at a Glance 2021*. Paris: OECD Publishing.

3. 인터넷 인출 자료

- e-나라지표. (2022).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에서 2022.10.28. 인출.
- e-나라지표. (2022.12.19.). 지니계수.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7 에서 2022.12.20. 인출.
- e-나라지표. (2022.8.1.). 기준 중위소득 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에서 2023.3.22. 인출.
- 공무원 연금공단. (2022.10.13.). 공무원연금공단_연금수급자 추이. <https://www.data.go.kr/data/15052972/fileData.do> 에서 2022.10.25. 인출.
- 국가지표체계. (2023a).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191#> 에서 2023.03.30. 인출.
- 국가지표체계. (2023b).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30&clasCd=10&idxCd=F0189&upCd=8#>에서 2023.03.30. 인출.
- 국방부. (2022.8.9.). 군인연금 현황 : 군인연금 수급인원 현황. <https://opendata.mnd.go.kr/openinf/sheetview2.jsp?infId=OA-9534> 에서 2022.10.25. 인출.
- 보건복지부. (2022.7.29.).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2418&SEARCHKEY=TITLE&SEARCHVALUE=%EA%B8%B0%EC%A4%80+%EC%A4%91%EC%9C%84%EC%86%8C%EB%93%9D 에서 2022.11.24. 인출.

- 오건호. (2022.2.28.).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외국보다 낮은가?.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22510010341629>
- 통계청. (2015). 2015 고령자통계-통계표.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1/index.board?bmode=read&bSeq=&aSeq=34856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EA%B3%A0%EB%A0%B9%EC%9E%90 에서 2022.10.28. 인출.
- 통계청. (2020.12.17.a). 가구특성별 비목별 소비지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BB08&conn_path=I3 에서 2023.3.31. 인출.
- 통계청. (2020.12.17.b). 가구특성별 비목별 비소비지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BB08&conn_path=I3 에서 2023.3.31. 인출.
- 통계청. (2020.12.17.c). 가구특성별 자산부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BD01&conn_path=I3 에서 2023.3.31. 인출.
- 통계청. (2022.12.1.a).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 에서 2023.3.31. 인출.
- 통계청. (2022.12.1.b). 가구특성별 비목별 소비지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B07&conn_path=I3 에서 2023.3.31. 인출.
- 통계청. (2022.12.1.c). 가구특성별 비목별 비소비지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B06&conn_path=I3 에서 2023.3.31. 인출.
- 통계청. (2022.12.1.d). 가구특성별 자산부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D01&conn_path=I3 에서 2023.3.31. 인출.
- 통계청. (2022.7.2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국민기초생활수급자총괄(일반, 시설)-시도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1&conn_path=I3 에서 2022.10.28. 인출.
- 통계청. (2023.4.12.a). 성/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45S&conn_path=I3 에서 2023.4.15. 인출.
- 통계청. (2023.4.12.b). 연령/활동상태별(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47S&conn_path=I3 에서 2023.4.15. 인출.
- OECD. (2022a).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 Incidence of low pay*.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EC_I 2022.10.30.
- OECD. (2022b). *Incidence of unemployment by duration*.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UR_D 2022.10.30.
- OECD. (2023a). *Poverty rate (indicator)*. Retrieved from doi: 10.1787/0fe1315d-en 2023.3.31.
- OECD. (2023b). *Income inequality (indicator)*. Retrieved from doi: 10.1787/459aa7f1-en 2023.3.31.

4.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8607호. (2021).

주거기본법, 법률 제186561호. (2021).

최저주거기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2011).

헌법, 헌법 제10호.(1987)

5. 데이터 베이스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